

커버스토리

신혼부부 서울 아파트 전셋값 마련에 29년?
30살의 신혼부부가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29년이 걸린다는 경실련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는 계속 빚 얻어서 집을 사라고만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에 주택거품조장을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 종합정론지 2014_11, 12월호 | 월간경실련 통권 143호

경실련 | 공동대표 임현진 선월몽산 최정표 최인수 중앙위원회의장 박상기 상임집행위원장 김호균 정책위원장 채원호 사무총장 고계현
월간경실련 | 발행인 고계현 편집인 윤순철
편집기획위원 권오인 김상수 김한기 남은경 윤철한 정지영
발행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전화 02)765-6400 팩스 02)741-8564~5
편집디자인 ㈜현대아트컴 인쇄 ㈜현대아트컴 1990년 5월 24일 등록 서울라10131 2014년 11월28일 발행

CCEJ(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26-9 Dongsung 3gil Chongro-gu, Seoul, Korea
Phone : 82-2-765-6400 Fax : 82-2-741-8564-5 http://www.ccej.or.kr

CONTENTS

도시인

- 12 하이라인 전성시대 / 류중석

동승동칼럼

- 18 삼성이 3세 경영 승계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 금산분리 / 고계현

기획특집

- 20 ① 되풀이 된 '부실 국감' 근본적 제도개선 나서야 / 김상수
- 25 ② 집값바닥? 소득대비 주택가격 여전히 과도하게 높다 / 최승섭
- 30 ③ 정부 주장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관련 30대 중점법안에 대한 평가 / 김한기

시사포커스

- 36 ① 세금문제 더 이상 회피 말고 정면에 나서야 할때다 / 최예지
- 40 ②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 어떻게 되는 걸까? / 권태환
- 42 ③ 삼성그룹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과정에서 금산분리 특혜를 해소하라 / 권오인

통일마당

- 46 북한 인권과 남북 대화, 이렇게 풀어나 / 서보혁

안녕하세요? 회원님!

- 50 [인터뷰] 조건영 회원님
"언젠가는 경실련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는 회원이 되고 싶어" / 정지영

경실련 사람들

- 52 ① 경실련이 지녔던 초심의 회복과 열정어린 노력이 필요한 때 / 박지호
- 55 ② 과연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한국경제 발전모델은 무엇인가 / 최예지
- 61 ③ 모두가 노력한 만큼 잘 사는 날이 빨리 오도록 경실련이 더 노력해야 / 정택수
- 64 ④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의 - 제69차 유엔총회이야기 / 이현아



12 도시인
하이라인 전성시대



46 통일마당
북한 인권과 남북 대화, 이렇게 풀어나

지역이야기

- 66 ①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과 경복형 조경 / 조근래
- 68 ② 지방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언제까지 되풀이 해야만 하는 것인가? / 정병인
- 70 ③ 세월호 참사 그 이후 / 김경민

문화산책

- 72 외로움을 인정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 이학린

동승동 책방골목

- 74 "과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 / 김동규
- 75 44년이 지난 지금, 우리 '노동자도 사람'인 세상을 살고 있을까? / 심재석

국제개발리포트

- 76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국제사회의 이중주: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분절화와 통합화 / 김태균

회원기고

- 80 통일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 / 박경화

편집자에게

- 84 딱딱할 줄 알았던 월간 경실련의 반전 / 백지선

회원게시판

- 86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경실련 일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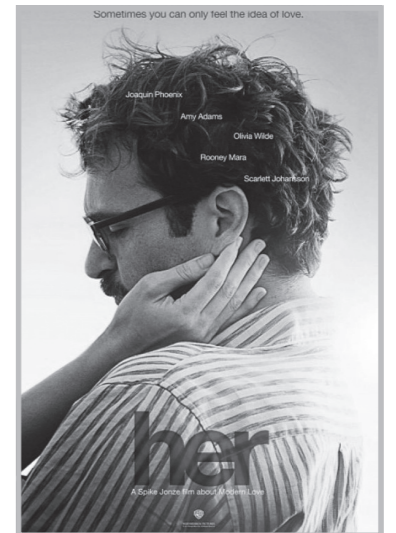
- 88 경실련 일일보고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 90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66 지역이야기 1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과 경복형 조경



72 문화산책
외로움을 인정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하이라인 전성시대

류중석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 뉴욕의 하이라인 공원 전경

뉴욕시의 자랑거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센트럴 파크(Central Park)다. 전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다는 맨해튼(Manhattan) 한복판에 843에이커(3.41km²)에 달하는 그렇게 넓은 공원을 가졌으니 뉴욕커(New Yorker)들이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최근 뉴욕에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생겼다. 폐선 선로를 이용한 “하이라인(High Line)”이라는 선형 고가공원(線形 高架公園)이다.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되었던 고가선로는 공원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를 본떠서 서울역 고가도로를 선형공원으로 만드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이 뉴욕의 하이라인 공원처럼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는 성공적인 공원이 될 수 있을까?

왜 하이라인인가?

뉴욕, 파리, 런던 등 오래된 대도시에는 예의 없이 고가철도 선로가 있다. 한때 대중교통의 큰 축을 담당했던 이 고가철도는 지하철과 버스 망이 확충되면서 폐지되어 도시의 흉물로 남았다.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 이 폐선 철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던 중 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가장 먼저 파리에서 프롬나드 플랑떼(Promenade plantée)라는 선형 고가공원을 만들었고, 이어서 뉴욕에서 하이라인(High line)이라는 선형 고가공원을 만들었다. 이제 서울에서도 선형 고가공원을 볼 수 있을 날이 멀지 않았다.



▲ 파리 프롬나드 플랑떼 전경
(사진출처: <http://www.localnomad.com>)

선형 고가공원은 평지에 있는 일반 공원에 비해서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높은 지점에서 도시 가로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고가 선로를 조금 변형하면 훌륭한 도심 전망대를 쉽게 만들 수 있고, 형태가 선형이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다양한 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도심의 건물과 2~3층 높이에서 접속하여 다양한 도시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3층 높이에서 도심 건물로 직접 출입할 수도 있고 건물 앞의 진입 공간이나 휴식공간과 연계하여 훌륭한 매개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선형 고가공원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이 어렵다.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공원에 꼭 있어야 할 나무를 심기도 어렵다. 나무가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토심(土深)이 깊어야 하는데, 고가철도의 특성상 토심을 깊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폭이 좁아서 다양한 공간의 창출이 어렵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선형 고가공원이 세계 대도시에서 유행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도심에서 그만한 공간을 공원으로 확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별도로 공원용지를 확보하지 않고 기존의 고가철도나 고가도로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부지확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 프롬나드 플랑떼 하부의 상점들
(사진출처: <http://www.likehomeinparis.com>)



▲ 프롬나드 플랑떼 서쪽의 보행자 전용 구간
(© Anthony Atkielski)

선형 고가공원의 선구자 - 파리 프롬나드 플랑떼

사실 선형 고가공원의 선구자는 뉴욕 하이라인이 아니라 파리의 프롬나드 플랑떼(Promenade plantée)¹⁾이다. 프롬나드 플랑떼는 바스티유 오페라(Bastille Opera) 동쪽 지점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4.7km에 이르는 고가공원을 말한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파리는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바스티유 기차역을 허물면서 이 일대의 재개발을 시작하였다. 재개발 계획에는 이 지역을 지나는 폐선 철도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들어있었다. 세계 최초의 고가공원인 프롬나드 플랑떼는 조경가 자끄 베르즐리 (Jacques Vergely)와 건축가 필립 마티유 (Philippe Mathieux)가 설계를 맡아 1993년에 완공되었다. 2009년 뉴욕의 하이라인 1단계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프롬나드 플랑떼는 세계에서 유일한 선형 고가공원이었다.

프롬나드 플랑떼의 서쪽 구간은 보행자 전용이고 동쪽 구간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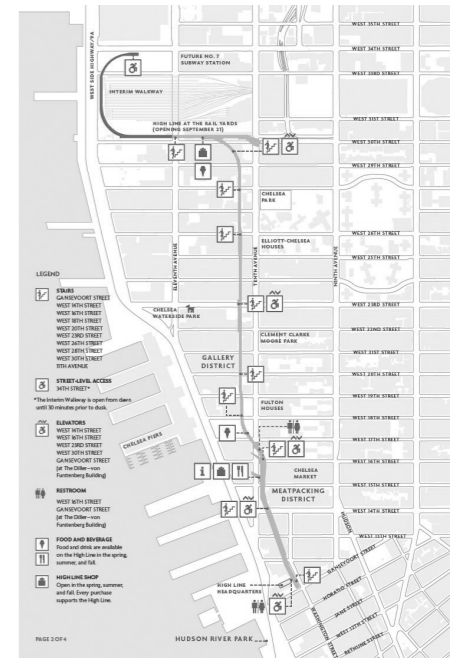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기존의 철도를 떠받치고 있던 아치 형태의 공간을 고급 예술품 및 공예품 상점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건물 사이를 지나는 구간과 개방된 구간이 함께 존재하여 다양한 경관을 보여줌과 동시에 주변 건물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도 우리의 관심을 끈다.

뉴욕의 하이라인 공원

파리의 프롬나드 플랑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작한 뉴욕의 하이라인 공원은 맨해튼 서남쪽의 14번가에서 34번가에 이르는 남북방향으로 놓인 2.33km에 달

하는 선형 고가공원이다. 1999년에 폐선 철도가 지나는 구간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하이라인의 친구들(Friends of the High Line)이라는 시민단체가 결성되어 이 일대를 보존하고 공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시민운동에서 전문 사진작가가 찍은 폐선부지의 예술사진이 여론을 움직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어서 모금 운동이 시작되었고 2004년에 뉴욕시가 5천만 불을 하이라인 공원에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2006년부터 본격적인 공원조성사업이 시작되었다. 제임스 코너(James Corner)가 경영하는 조경회사인 필드 오퍼레이션즈(Field Operations)가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설계가 시작되었고, 건축가 딜러스코피디오(Diller Scfidio + Renfro), 네덜란드의 식재 전문가인 삐에 우돌프(Piet Oudolf) 등이 설계에 참여하였다.

2009년 1단계 구간 준공에 이어 2011년에는 2단계 구간이 준공되었고, 2014년 9월에 마지막 3단계 구간이 준공되어 5년에 걸친 하이라인 공원건설 공사가 마무리되어 전 구간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 뉴욕 하이라인 안내도
(사진출처: <http://www.thehighline.org>)

하이라인 공원의 특징과 하이라인 효과

하이라인 공원은 도심 폐선 고가철도의 특징을 잘 활용하여 설계한 공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건물 속으로 관입되는 철도선로 구간을 그대로 살린 점, 기존 철도선로에서 사라던 풀을 위주로 식재한 점, 그리고 중간에 기존 선로의 일부분을 남겨놓아 과거 이곳이 철도 선로였음을 상기시켜주는 설계를 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된다. 또한, 중간에 유리벽으로 트인 도심전망대를 설치하거나, 흐르는 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좁은 선형공원의 제약을 탈피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건물 벽면에 기대어 계단 모양의 휴식용 벤치를 설치한다던가, 건물 1층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는 등 주변 건



▲ 건물로 관입되는 하이라인 공원 (출처: 저자)

1) 불어인 프롬나드 플랑떼(Promenade plantée)는 가로수길(tree-lined walkway) 또는 녹색길(green course)로 번역할 수 있다.



▲ 유리벽으로 트인 도심전망대 구간 (출처: 저자)



▲ 흐르는 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휴식공간 (출처: 저자)



▲ 주변 건물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한 하이라인 공원 (출처: 저자)

물과 하이라인 공원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설계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스페인 북부의 공업도시 빌바오에 프랑크 게리(Frank Gehry)라는 건축가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하여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관광 도시로 탈바꿈한 것을 일컬어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라고 한다. 뉴욕의 하이라인도 이에 버금가는 하이라인 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하이라인 공원이 준공된 후 범죄감소 효과, 신분상승효과(gentrification) 등이 매스컴에 소개되자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유사한 프로젝트를 기획할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이라인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자 하이라인 주변이나 끝 부분에 박물관을 건설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2015년에는 하이라인의 남쪽 끝부분에 휘트니 박물관이 완공될 예정으로 있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의 성공조건

서울역 옆을 지나가는 총 길이 938m의 고가도로는 지어진지 44년이 넘는 오래된 고가도로다. 2006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을 받아 철거가 예정되었던 시설이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뉴욕의 하이라인 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철거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²⁾ 고가도로 공원으로의 재생방침을 밝혔다. 지난 10월 12일에는 시민들이 서울역 고가도로를 걸을 수 있도록 개방행사도 실시했다. 그러나 주변 상인들은 교통대책 없이



▲ 서울역 고가도로 전경 (출처: 서울시)

추진될 경우 교통정체로 인하여 주변 상권이 침체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시위를 벌였다.

뉴욕의 하이라인 공원과 서울의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은 차이가 많다. 우선 하이라인 공원의 장점인 주변 건물과의 연계가능성이 없고, 프롬나드 플랑떼에서처럼 교각 하단부분을 활용하기도 어렵다. 그냥 공중에 떠있는 선형공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남산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서 녹지축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는 것도 과제이다. KTX, 인천공항철도, 지하철, 버스환승센터 등 교통환승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행연계전략도 치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추진방식에서도 국제현상설계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국가상징 축 상에 들어서는 선형 고가공원인 만큼 외국 참가자들이 한국의 이러한 사정을 잘 감안하여 좋은 설계안을 낼 수 있을지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조급한 추진방식이다. 뉴욕 하이라인 공원의 경우 10여년에 걸친 의견수렴과 시민운동이 뒷받침이 되어 성공할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임기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둘러 추진했던 청계천 복원사업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역 고가공원은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그리고 충분히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경**

2)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헤럴드 경제의 보도(2014.10.21)에 의하면 철거에 드는 비용은 80억원, 재생에 드는 비용은 380억원이다.

삼성이 3세 경영 승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 금산분리



삼성SDS와 제일모직이 각각 11월14일과 12월18일에 각각 상장하기로 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일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현재 삼성그룹은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고리를 중심으로 삼성화재해상, 삼성카드,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물산 등 8개 기업들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제일모직 상장에 맞춰 삼성카드,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물산 등이 제일모직 지분 18.5%를 처분하고, 삼성화재해상이 삼성전자 지분 1.09%를

처분하여 순환출자를 해소할 계획이다. 재벌들의 고질적 문제인 순환출자를 정리하면서 제일모직 상장 후 주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삼성그룹이 갖는 셈이다.

삼성SDS와 제일모직 상장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 이진희 회장 3남매는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은 후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기 위한 비용 마련도 마쳤고, 이제 그룹승계 과정에서 남는 것은 3남매가 어떤 방식으로 무슨 사업부문을 나눌 것인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이진희 회장 일가의 관점일 뿐 국민경제 관점에서는 더 큰 숙제가 남아있다. 이른바 금융과 산업의 복합 시스템으로 인한 '삼성 리스크' 해결의 문제이다. 즉 삼성전자의 부실이 삼성생명의 자산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삼성그룹 전체로 나아가 우리 경제에 막대한 리스크를 야기할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다.

삼성그룹의 2013년 매출액은 333조 8,920억 원으로 GDP대비 23.4%이고, 자산총액이 558조 7,770억 원으로 GDP대비 39.1%이다. 또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02조 947억 원으로 전체 상장회사 시가총액의 15.5%를 차지하고, 삼성그룹 상장회사 17개사의 비중은 22.5%이다. 나아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체 상장회사 영업이익의 20.4%이다. 따라서 만약 삼성그룹의 몰락은 우리 경제 제조업과 금융산업의 위기로 이어져 이전에 겪었던 1997년 외환위기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 올 것이다.

작년 동양그룹 사태에서 동양증권이 계열사인 (주)동양의 부실로 인해 동반 부실

로 이어지고 동시에 그룹 전체로 위협이 전이돼 결국 엄청난 피해자만을 양산한 채 몰락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삼성전자가 노키아처럼 한순간 무너지지 않는다고 영원히 보장할 수 없고 삼성그룹이 동양그룹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삼성그룹이 국민경제를 생각한다면 이런 위험요소를 그룹 승계와 이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의 삼성은 이진희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수많은 종업원들의 희생과 국민들의 지원에 의한 결과물이다.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이진희 회장 일가는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삼성그룹의 금산복합(金産複合) 시스템은 정부와 정치권의 2가지 특혜에 의해 가능했다. 하나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초과보유를 인정해주는 금산법 특혜부칙(금융회사의 일반회사 지분은 5%한도지만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 7.5% 보유허용)이다. 다른 하나는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은 건전성 규제를 위해 계열사 자산운용비율을 시장가액으로 하여 총자산의 3%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나 유독 보험의 경우만 예외로 산정기준을 시장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2013년 말 기준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의 주식은 삼성생명 총자산 7.5%에 해당하는 191조 345억 원을 보유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자산운용 기준을 시장가액으로 하여 초과 보유지분 4.5% 즉, 8조 3,753억 원을 매각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거나 합리화해 주어 지금의 금산복합 시스템에 의한 삼성리스크를 키워왔다.

삼성그룹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를 고려한다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문제는 일개 집안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그룹의 이진희 회장 일가는 3남매의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 아니라 차제에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상호출자구조를 완전히 해소하여 금산분리의 원칙이 이루어지는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삼성그룹을 승계하는 이진희 회장 일가가 한국 사회와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책무이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도 총수일가와 재벌의 이익보다 국민과 국민경제의 공익을 우선시하여 이처럼 증차대환 문제에 애써 외면할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버넌스가 국민경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에 미칠 중대성을 인지하고, 보험법 개정 등 정책수단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개편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서 삼성그룹 소유지배구조와 거버넌스가 진일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

되풀이 된 '부실 국감' 근본적 제도개선 나서야

2014년 국정감사를 말하다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peace@ccej.or.kr

10월 7일(화)부터 27일(월)까지 진행된 2014년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마무리됐다. 국감은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다.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감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올해 역시 국회의원들이 국감에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10월 29일 평가결과와 13개 상임위원회 28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의원들의 준비부족, 피감기관 자료제출·출석 거부...되풀이 된 '부실·맹탕 국감'

2014년 국감은 지난 6월 여야합의에 따라 8월 26일과 10월 1일을 기점으로 각각 10일씩 분리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발이 묶여 기약 없이 내몰리다 지난 9월 30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관한 원칙과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10월 7일 국감이 급히 시작됐다.

672개(2008년 628개)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피감기관을 기록한 이번 국감은 의원들의 준비부족 속에 시작 전부터 '졸속·부실·맹탕 국감'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정치적 공방보다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았다. 여야 모두 이를 반영해 짧은 준비기간 속에서도 '정책국감'을 표방했지만, 전체적으로 철저한 조사·분석을 통한 정밀한 자료와 증거로 국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며, 또 다시 '부실·맹탕 국감'으로 전락했다.

피감기관을 호통치고 자신의 발언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답변을 제대로 듣지 않는 등 의원들의 구태와 졸속도 여전했다.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문

제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몇몇 상임위에서 파행이 빚어졌고, 국방위에선 여당 의원들의 야당의원 폄하 메모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국감도중 비키니 여성 사진을 검색하다 물의를 일으킨 의원도 있었다.

피감기관들 역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미루다 국감전날 한꺼번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영업비밀이나 보안 등의 이유를 들어 핵심 내용을 뺀 채 자료를 제출하여 '정책국감'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의 국감 제출자료 사전검열, 보건복지위의 피감기관장 도피성 출국, 기재위·국토위에서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허위보고 등 고질적인 안하무인 태도도 여전했다.

현안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 등 '정책 국감' 가능성도 보여줘

올해 국정감사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문제와 최근 정부의 담뱃세·자동차세·주민세 인상계획에 따른 '서민증세',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최경환식 경기부양책'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감 종료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국감을 치렀다"고 자평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사찰, 4대강·해외자원개발실패, 인사적폐, 방산비리 등 박근혜정부의 6가지 적폐를 밝히는데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20일이라는 짧은 국정감사 기간으로는 그 많은 피감기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물론 성과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의원들의 참여도 및 성실도가 많이 증가했고, 일부 상임위에서는 '정책국감', '민생국감'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유린을 자행한 카카오톡 등 사이버사찰과 사이버망명, 재정적자를 늘리면서까지 정부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최경환식 경기부양책, 통영함 등 방사청 군납비리, MB정부 4대강 비리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 군피아(군+마피아)·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공피아(공정거래위원회+마피아) 등 관피아의 폐해를 드러낸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의 부작용을 파헤쳐 통신사들의 개선안 마련을 이끌어 낸 것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피감기관의 조직적인 국감방해 행위, 취약한 국감 사후조치 '부실 국감' 부추겨

국감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행정기관이 제대로 일을 해왔는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국감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감기관장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올해 국감에서는 유난히 피감기관장의 출석거부와 자료제출 거부 등 조직적인 국감방해 행위가 많았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관님 지시 사항: 의원 요구 자료 처리 지침'이라는 제목의 산업통상자원부 문건이 드러나면서 '산하기관 국정감사자료 사전검열' 파문을 일으켰다. 윤 장관이 지난 9월 22일 해외출장 중 '의원실에서 산하기관으로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각 기관별 소관과가 책임지고 산하기관 답변서를 스크린한 후 답변서가 제출토록 전파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미 공개된 사항 위주로 작성하라',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은 자제하라'는 등의 지시도 담겨 있다고 한다. 의원실에 제출할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전검열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상응한 책임과 징계조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낙하산 인사' 논란에 이어 '국감 도피성 출국'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국정감사 권한이 다시 부활한 1987년 이후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중국에서 열린 국제적십자사 아태지역 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 총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김 총재는 보건복지위원장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 문자메시지로 "23일 국감은 출석할 수 없으며, 27일 오후에 국감을 받겠다"며 피감기관이 국감 날짜를 지정하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2013년 국감에서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국가보훈처의 안보 교육 자료 요청을 거부하며 국감 파행의 단초를 제공했던 박승춘 보훈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며 논란을 불러왔다. 국무위원 발언은 위원장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서면보고로 대체하라는 위원장의 요구에도 박 처장은 '정부 입장 설명'을 이유로 발언을 고집하며,

규정에 따른 상임위원장의 지시를 한동안 따르지 않는 등 문제를 야기했다.

국회사무처 의사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현황은 2010년 355기관 5,596건, 2011년 352기관 5,564건, 2012년 314기관 6,223건, 2013년 318기관 5,965건 등에 이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에 따라 국회는 피감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처리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며, 처리결과보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정조치 결의 조사 및 분석작업을 수행할 국회 조사전담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보니 구체적 내용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공무원들 역시 1년에 한번만 고비를 넘기면 된다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은 고질적인 병폐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나서야

국회의 행정부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국감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피감기관과 증인채택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일회성 국정감사의 한계는 여전하다. 여야가 합의한 전·후반기로 나눠 실시하는 분리국감도 기간이 20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정감사 제도 개선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첫째, 단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중 상임위별로 켈린더식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시국감을 도입하고, 사안에 따라 국정조사나 청문회와 연계해야 한다.

둘째,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고, 국회 무시행태에 대해 예산삭감이나 주무 장관 해임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국감 사후검증 제도를 철저히 실시하여 앞으로 각 기관별 국감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부터 시작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입법·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감 사후조치 이행여부의 조사 기능을 수

국감
경과
기록

2014년 11월 12일

행하는 것도 방안이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한 해 동안 행정부의 국정 운영 실태를 따지고, 예산 낭비 사례 등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고유한 견제 권한이자 감시 기능 중 하나다.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때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될 것이다. 따라서 제도 개선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각성과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정**

<표1> 상임위별 우수의원

(상임위별 가나다순)

위원회	의원명	소속	선수 및 지역구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3선, 전남 목포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초선, 서울 중랑구갑
정무위원회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초선, 비례대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초선, 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새누리당	4선, 대구 수성구갑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초선, 비례대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재선, 인천 부평구갑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3선, 서울 동작구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초선, 서울 중랑구을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재선, 서울 관악구갑
	정진후	정의당	초선, 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재선, 서울 강동구을
	유승민	새누리당	3선, 대구 동구을
국방위원회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초선, 비례대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재선, 서울 동대문구갑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초선, 인천 남동구갑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초선,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초선,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안효대	새누리당	재선, 울산 동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정의당	초선, 비례대표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초선, 충남 천안시을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초선, 비례대표
	김현숙	새누리당	초선,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재선, 경기 고양시 덕양구갑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초선, 비례대표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재선, 경기 부천시 소사구
	김태원	새누리당	재선, 경기 고양시 덕양구을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초선, 충남 공주시

집값바닥? 소득대비 주택가격 여전히 과도하게 높다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사팀 부장
sub@ccej.or.kr

최경환 부총리를 필두로 한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거품을 되살려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됐던 집값하락이 바닥을 쳤으니 모두들 어서 집을 구매해야 경제가 살고 가계도 산다는 주장인데 결국은 부동산 거품 폭탄을 무주택자와 청년층에게 떠넘기겠다는 매우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동이다.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 문제는 그들에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임기동안 지금의 부동산거품이 꺼지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뿐이다. 주택담보대출을 필두로 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해도 주택 거래만 활발하다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 다르게 위례와 강남 등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주택거래 침체는 단순히 돈을 더 빌려준다고 해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요국 중 GDP대비 주택가격 가장 높아

주택구매를 꺼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소득에 비해 여전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 폭등기에 비하면 일정부분 하락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가격은 아직도 수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경실련이 외국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과 집값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집값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 결과, 서울의 주택 중간가격은 1인당 GDP대비 17.7배로 나타났다. 아파트로만 국한한다면 19.5배로 더욱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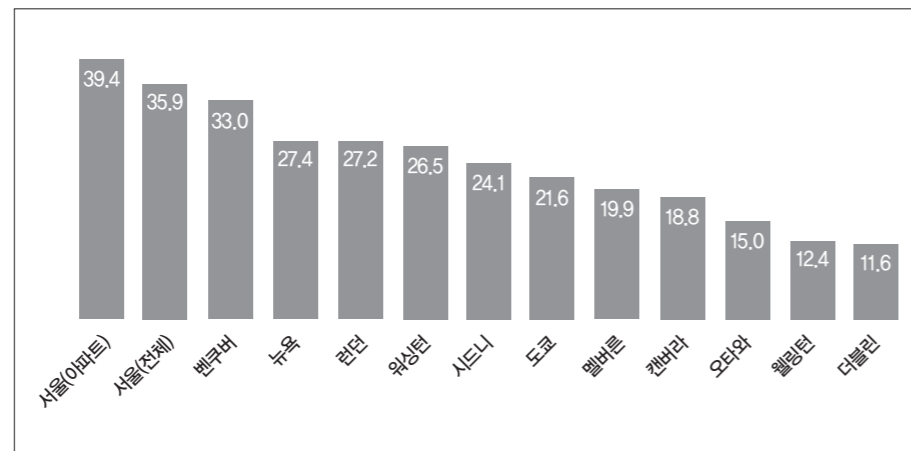
〈표1〉 주요도시 주택 중간가격과 국민소득 비교 (단위: 천원)

국가	도시명	중간가격(A)	1인당 GDP 대비	
			1인당 GDP(B)	차이(A/B)
한국	서울(아파트)	483,890	24,846	19.5
	서울(전체)	440,790		17.7
영국	런던	554,859	40,701	13.6
캐나다	밴쿠버	696,241	54,065	12.9
	오타와	315,661	54,065	5.8
호주	시드니	750,668	66,871	11.2
	멜버른	618,546		9.2
	캔버라	583,957		8.7
미국	뉴욕	421,089	55,074	7.6
	워싱턴	407,690	55,074	7.4
뉴질랜드	웰링턴	297,795	42,177	7.1
일본	도쿄	268,177	40,984	6.5
아일랜드	더블린	286,292	49,907	5.7

주) 최저임금 : OECD(2013), 1인당 GDP : IMF(2013), 해외 중간가격 : Performance Urban Planning(2013), 국내 주택가격 : 국민은행(2013)

이에 비해 런던 13.6배, 시드니 11.2배, 뉴욕 7.6배로 우리나라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도쿄의 경우에도 6.5배에 불과하다.

〈표2〉 주요도시 주택 중간가격과 연간 최저임금 비교 (단위: 배)



특히나 각국의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심해진다. 각국의 주택가격은 연간 최저임금 대비 런던 27.2년, 시드니 24.1년, 뉴욕 27.4년, 도쿄는 21.6

년치에 해당한다. 더블린은 11.6년, 웰링턴은 12.4년에 불과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35.9년으로, 3배 이상 시간이 걸렸다. 36년간 최저임금을 단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월 흑자액은 감소하는데 집값은 3배 증가

좀 더 현실적으로 월 소득 300만원대의 근로자 가구와 주택가격을 비교해 보자. 세금, 연금 등의 비소비 지출과 식비, 교육비, 교통비 등 소비 지출을 제외한 월 흑자액은 가구당 63만원으로 2000년 70만원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소득에 비해 지출이 더욱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가격은 1.7억원에서 4.9억원으로 2.9배가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과의 차이가 5년에서 12년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중간소득으로 볼 수 있는 월300~4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의 경우 흑자액으로 집을 구매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00년 20년에서 지난해 64년으로 증가해, 경제활동을 20대 후반에 시작하고 30대 초반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평생 동안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신혼부부, 전문대졸 근로자 소득변화 및 아파트 전세가격 비교 (단위: 천원)

년 도		2009 ①	2011	2013 ②	상승률 (②/①)	
전세 중간가격	서울	201,378	251,126	282,092	40%	
	수도권	147,924	185,076	208,634	41%	
맞벌이 신혼가구 (주1 / 주2)	월 흑자액	976	881	826	-18%	
		대비 (년)	서울	17.2	23.8	28.5
	수도권	12.6	17.5	21.1	67%	
전문대이상 월 소득(남, 30-34세)		1,965	2,148	2,283	16%	

자료) 국민은행(전세 중간가격 : 전세 전세거래가격 중 중간에 위치한 가격), 통계청, 고용노동부
주1) 신혼부부 평균나이: 남자 32.2세, 여자 29.6세(통계청)
주2) 2인 맞벌이 신혼가구 평균소득 425만원, 흑자액=가구소득-비소비지출(연금, 세금)-소비지출(통계청, 400-500만원 소득구간)

신혼부부 아파트 전셋값 마련에 수도권 21년, 서울 29년 소요

결국 많은 신혼부부들은 비싼 주택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세와 월세 등 임대를 통해 주거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혼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세의 경우 아파트 전셋값을 마련하는데 서울은 28.5년, 수도권은 21.1년이 걸

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전문대졸 이상 맞벌이 신혼가구의 평균 실질 임금은 425만원이고 이 구간의 월 흑자액은 83만원이다. 아파트 전세 중간가격은 서울 2.8억, 수도권 2.1억으로 나타났다. 30살의 신혼부부가 환갑이 다되어야 빛 없는 전세금 마련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들의 소득이 계속해서 늘어나겠지만 임대료의 상승은 더욱 가파르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나 대출 없이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4년 전 보다 서울은 11년, 수도권은 8년이 늘어나는 등 그 증가폭이 크다.

정부는 주택거품 조장을 위해 규제완화와 대출증대 등을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자료에서 보듯 지금 무주택자와 청년층이 집을 구매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득에 비해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과 이후 추가적인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지금 당장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겠지만 미래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적고, 과거 집값상승을 노리고 무리하게 집을 구매했다 피해를 본 하우스푸어의 사례를 본 이상 주택을 구매하는 간 큰 사람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빚잔치를 통해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주택 구매를 유혹하려는 부도덕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주택거품 제거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보유세 강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소득세 부과 등을 통해 거품을 제거하고, 당장 주거불안에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결단해야 한다. 지난 1년간 주거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가계 건전성을 악화시킨 매매 활성화 대책을 지속한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서민 주거를 더욱 파탄으로 몰고 간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다. **경**

정부 주장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관련 30대 중점법안에 대한 평가

정부 주장 민생법안은 가짜 민생법안
실제 민생안정 법안은 전체 법안 중 10%인 3개에 불과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khk@ccej.or.kr

청와대는 지난 10월 1일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현안 월례브리핑에서 안중범 경제수석의 말을 빌어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에 따라 정기국회 의사일정 정상화에 맞춰 정부·여당이 마련한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30개에 대해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에는 학교 인근에 호텔 건립, 의료영리화 촉진 등 재벌특혜성 법안이거나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30대 중점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실제로 법안의 내용이 민생 또는 경제활성화와 관련이 있는지, 또 해당 법안의 효과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해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다음과 아래와 같습니다.

<표1> 정부 주장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관련 30대 중점 법안 평가내용

□ 민생안정 및 금융소비자보호 법안(8개)

법안명	주요 내용	정부 주장	경실련 평가 내용	법안 분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 수급 대상자의 생계, 의료 등 욕구별로 급여 지급	• 수급자 확대(40만 명)로 교육, 의료, 주거분야 복지사각지대 완화 해소	• 대상 확대에 의해 사각지대 개선에 긍정적인 민생 법안임 • 단 최저생계비 선정 기준에 법에 명시해 정부의 재량적 급여 축소를 방지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국가재정법	•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및 정보지원 등을 위한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 정부 및 지자체 등이 시행중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통합해 중복방지 등 효율적인 지원 가능	• 2015년 1월 소상공인지원진흥기금 운영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임 • 여야 쟁점이 없으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이므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	민생안정 법안

법안명	주요 내용	정부 주장	경실련 평가 내용	법안 분류
산재보상 보험법	•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해 적용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	•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수혜 가능	• 산재보험 대상자가 범위가 넓어져 의미있는 내용임 • 그러나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 제도가 임의가입으로 제도화돼 당초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위상이 손상되고 결과적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보호가 어렵게 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이관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시 자기자본을 초과해 출자 허용	• 외부출자 한도 완화 등으로 조합이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경제 사업을 효율적·전문적으로 수행가능 하게 하려 함	• 농협외에 유사협동기관에서 동일하게 출자한도를 제한하는 취지에 비춰, 농협에만 특혜가 주어지는 셈이 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해당 법안은 출자에 대한 규제 완화일 뿐 투자활성화와는 무관하여 철회되어야 함	경제활성화와 무관한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보호범위 확대	• 중견기업에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일부 부여해 보호	• 중견기업에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일부 부여해 보호해 의미있음 • 그러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부당반품 등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탈법행위를 통한 법적용 회피를 방지할 수 없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조속한 통과보다는 신중한 논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신용정보법	• 개인정보 보유기간 축소, 개인신용정보 보호요청제도 도입	•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보유-활용-파기단계별 맞춤 정보보호 방안 마련	•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피해입증책임 전환 등 피해자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법안도 일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여야 이견이 없을 경우, 입법 가능하다고 판단됨	민생안정 법안
금융위설치법	•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 신설	• 금융회사의 부당행위(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사전피해 발생 예방 가능	•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 금융산업정책이 우선시되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이유로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큼 • 조속한 통과보다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자본시장법	•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 엄벌	•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해 행정벌인 과징금 부과로 신속하게 처벌 가능	•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배상 및 보상조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 • 그러나 처벌이 강화된 측면에서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민생안정 법안

□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5개)

법안명	주요 내용	정부 주장	경실련 평가	법안 분류
소득세법	• 주택수에 관계없이 2천만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	• 과세방안을 둘러싼 논란과 불확실성 해소를 주택 매매 및 임대차시장 활성화 계기 마련	• 130만명의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음. 실제 세금은 임대소득의 3%로 과하지 않음 • 다주택자들에 대한 특혜이며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므로 철회되어야 함	부자감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월세 10% 세액 공제	• 연간 1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지어 • 월세 세입자의 생계비부담을 크게 경감	• 집주인들이 월세 공제액만큼 월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가계부담 경감 효과없음 • 서민주거안정을 달성하기 어려운채 재정부담만 안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주택법	• 주택분양가상한제 원칙 폐지	• 현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	• 선분양제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거품 띄우기 위한 정책임 •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민생안정에 역행하는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함	민생안정에 역행하는 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부담금 부과 폐지	• 재건축 사업추진을 지원시키는 심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 폐지로 재건축사업 활성화 도모	• 재건축은 양적용량 상향 등 공공재를 이용하는 제도 • 폐지될 시 개발이익을 노리고 재건축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돼 철회되어야 함	무분별한 규제 완화 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시 소유주택수만큼 신규주택 공급 허용	• 소유주택 수만큼 신규주택 우선 공급을 허용해 재산권 보호도모	• 재산권 보호를 위해 투기 목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전제로 일정수 이하로 완화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으나 투기목적의 판단이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각종 편법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됨 • 투기방지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임대소득세 정상화, 공급받은 신규주택 매매차액에 대한 환수가 선행된 이후에 논의되는 것이 타당함 • 사회적으로 논란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 지역경제 활성화 법안(5개)

법안명	주요 내용	정부 주장	경실련 평가	법안 분류
주택도시 기금법	• 주택기금을 주택도시 기금으로 개편해 도 시재생사업까지 지원 확대	• 민간물량주택 개 량, 소규모 임대주 택 건설에 대한 자 금지원으로 양질 의 임대주택 공급 촉진	• 출자와 금융투자 사업 등 기금 의 용도 확대에 대한 기금운 영의 부실이 우려됨 • 자칫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이익이 대기업에만 쏠릴 가능 성이 높음 • 국민주택기금의 평가와 도시 재생사업을 위한 기금의 필요 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 회적 합의가 이뤄진 후 추진 돼야 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국토계획 이용법	• 입지규제최소구역 신 설, 입지규제 최소구 역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의제	• 기존의 획일적 입 지규제에서 벗어나,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지역특 성에 맞는 창의적 인 지역개발을 활 성화	• 난개발을 부추길 수 밖에 없는 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은 도 시의 쾌적성과 공공성을 훼손 하는 정책임 • 재벌특혜와 민생안정에 역행 하는 법안으로 철회돼야 함	민생안정에 역 행하는 법안
토지이용 간소화 특별법	• 인허가 통합·간소 화, 사전정보제공, 사 전심의제도 도입, 인 허가 협의기간·보완 횟수 명시 등	• 국민의 불편 해소 와 국가경쟁력 강 화에 기여	•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목 적과 기대 효과가 상이함에도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간 소화하는 것은 자칫 난개발을 유발할 우려가 높음 • 충분한 사전적 검토 후 추진돼 야 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도시공원 녹지법	• 민간공원 특례제 도에서 기부채납 비율 완화	•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의 조성 활성 화 도모	• 국가가 해야 할 도시공원의 조 성을 민간자본의 이익을 보장 하기 위해 공원규모를 축소하 고 현금예비 비율 및 공원 기 부채납비율을 완화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음 • 민생안정과 무관한 규제완화 법안이므로 철회돼야 함	민생안정과 무 관한 법안
산업집적 활성화법	• 산업단지내 다양한 시설입주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도입	• 산업의 융복합화 및 첨단화를 촉진 하고 근로자의 정 주여건을 개선	• 산업단지 내의 복합용도구역 도입은 산업시설구역, 지원시 설구역, 녹지구역 등의 용도를 제한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위해물 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이 무방 비로 노출되는 등 부작용 초 래할 수 있음 •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된 후 추 진돼야 할 법안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 서비스산업육성 법안(12개)

법안명	주요 내용	정부 주장	경실련 평가	법안 분류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 서비스 R&D 투자확 대 및 IT 활용 촉진 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서비스산업 육성 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체계적 인 정책지원 가능	• 전방위적 규제완화로 전국민 적 피해 우려, 의료영리화 촉 진으로 인한 특정대기업 혜택 등 폐해가 우려됨 • 조속한 통과보다는 신중하게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의료법	• 국내보험사와 보험계 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행 위 허용	• 현행 관광객 위주 에서 중증 상시 환 자 등 새로운 외국 인 환자 유치 가능	•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알선 행위 허용은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어 의료영리화가 심화될 것임 • 영리를 금지하는 의료법 취지 와 전면 배치되며 건강보험 잠식할 위험성 내제함 • 민생과는 역행하는 무분별한 규 제완화 법안이므로 철회돼야 함	무분별한 규제 완화 법안
의료법	• 의사-환자간 원격의 료 허용	• 의료취약지역 주 민 불편 해소	• 부작용 및 의료양극화 초래로 의료공공성 훼손하는 반민생 규제완화 법안 • 안전성 검증 없이 재벌대기업 의 의료영리화를 돕는 대기업 특혜법안이므로 철회돼야 함	재벌특혜 법안
의료법	• 공항 등 외국인관광객 이 이용하는 장소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 료 광고 허용	• 해외환자 50만명 유치를 통한 의료 관광 활성화	• 해외환자 유치 효과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의료기관 간 광고 의 과잉경쟁을 유발해 의료상 업화를 가속화함 • 민생과 무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법안이므로 철회돼야 함	무분별한 규제 완화 법안
의료기기법	• 위험도가 낮은 의료 기기 허가신고 업무 를 공공기관에 위탁	• 신의료기술 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 한 신의료기기 상 품화 및 신시장 창 출 촉진	• 안전성이 최우선돼야 할 환자 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 기기의 심사와 허가를 민간에 위탁하는 반민생 법안이므로 철회돼야 함	민생안정에 역 행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 내 유해부대시설 이 없는 관광숙박시 설 허용	• 2017년까지 0.7조 원의 투자효과 및 1만7천개 일자리 창출 효과기대	•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은 청 소년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뿐 만 아니라 공공과잉으로 인한 영세사업자 도산과 나쁜 일자 리를 양산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특정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 하는 재벌특혜 법안이므로 철회 돼야 함	재벌특혜 법안

법안명	주요 내용	정부 주장	경실련 평가	법안 분류
국제회의 산업육성법	• 국제회의(MICE) 복합 지구 지정, 부담금·융자를 혜택, 관광기금 지원	• 국제회의산업 인프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국제회의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함	• 부담금 및 세금 감면, 융자를 완화해 따른 혜택들이 재발 대기업에 국한돼 지원될 가능성이 높음 • 일자리창출 등 부대산업 진흥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 철회돼야 함	재벌특혜 법안
크루즈법	• 크루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 향후 10년간 3만 톤급 국적 크루즈선 10척 취항 가정 시 약 9천개의 일자리 창출	• 사행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양질의 투자나 고용이 확대될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건전한 경제성장에 저해될 수 있음 •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으로 철회돼야 함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마리나항만법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고시의제 신설,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 포함	미래레저산업인 마리나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폭제 예상	•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되면서 부동산 거품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음 • 민간투자자가 하천법상의 토지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도 감면을 받는 것은 과도한 특혜법안일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으로 철회돼야 함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경제자유구역법	•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방식을 경쟁촉진 형태로 전환	• 공모방식을 통해 경제 자유구역에 유리한 사업자 선정 가능	• 공모 방식 전환으로 사행산업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확대 될 것임 • 외국인 카지노업을 위한 외국 투기자본 유입은 국민적 피해 초래 •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으로 철회돼야 함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클라우드 컴퓨팅법	•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근거 마련	• 낙후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 정책이 필요	• 공공 클라우드 적용의 경우, 실질적으로 규모의 경제 및 보안 등의 이유로 재벌 IT기업 밖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임 • 사실상 재벌특혜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함	재벌특혜 법안
자본시장법	•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별도 담보 없이도 쉽게 자금조달하는 채널 마련	• 중개업자가 투자자문도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허용, 연간 투자한도를 폐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음 • 법안 통과시 투자자의 피해발생 우려가 매우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경실련은 위와 같은 평가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각 법안의 성격을 분류했습니다.

〈표2〉 정부 주장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30법안 전체 요약표

구분		법안명	합계	
반대	특정 계층 및 집단을 위한 법안	재벌 특혜 법안	의료법(원격의료 허용),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클라우드컴퓨팅법	4
		부자 감세 법안	소득세법	1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와 무관하거나 역행하는 법안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와 무관한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도시공원녹지법	2
		민생안정에 역행하는 법안	주택법, 국토계획이용법, 의료기기법,	3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의료법(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의료법(공항 등에 의료광고 허용), 크루즈법,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법	6		
검토	사회적 논란 등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산재보상보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위 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 산업집적활성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법 (크라우드펀딩 도입)	11	
		찬성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법안	국가재정법,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시장교란행위엄벌)
합계		-	30	

정부와 여당이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30개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관광진흥법을 비롯한 5개 법안은 민생법안을 가장한 재벌특혜 또는 부자감세 법안이었습니다. 특히 농업협동조합법 등 11개 법안은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민생안정에 역행하는 법안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위 법안들이 통과됐을 경우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일자리창출이나 건전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이 부실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 중 금융위 설치법 등 11개는 법안 통과시 나타나는 다양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 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그에 따른 합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실련은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들 법안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올바른 방향과 내용의 입법들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세금문제 더 이상 회피 말고 정면에 나서야 할때다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평가

최예지 경제정책팀 간사
cyj@ccej.or.kr

지난 몇 달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로 국민들은 세금 소용돌이에 갇혀버렸다. 누구도 환영하는 사람 없었고 모두다 불만 투성이다. 국민의 소득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발표해서 내심 기대도 했었다. 막상 열고 보니 정책의 목적도 원칙도 잃어버린 누더기 같은 세제개편안만 남았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세제개편안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인가?

그래서 경실련이 2014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분석했다. 그 결과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소득층에게는 감세혜택을 주고 서민들에게는 세 부담을 전가하는 세제개편안이었다.

감세 혜택은 소수의 고소득자에게

2014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 한 것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묶어 3대 패키지라고 명명하며 거창하게 시작했다. 우리의 지갑이 두둑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보통의 국민은 혜택을 볼 수 없는 세제개편안이다. 배당소득 증대세

제는 주식 배당금에 관한 세율을 38%에서 25%로 낮춰주고 다른 소득과 합쳐서 전체소득에 종합과세하던 것도 배당금만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겠다는 정책이다. 우리나라 총인구(50,146천명) 대비 주식 투자자는 (5,020천명) 10% (2013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전체 투자자 중 시가총액 5억원 이상 가진 5만 1천명 (1%)이 전체 주식 시장 규모의 62.6% 보유하고 있다. 2013년 국세통계연감에 나온 배당으로 소득 올린 자들에 한해 단순 세율 인하율로만 계산해봐도 9천7백억원에 이르는 세제혜택을 받게 되며, 5억원 이상의 종합소득을 갖는 7624명은 6천 8백억원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과연 우리는 이 세제혜택자에 포함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세제안은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면 그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겠다 밝힌 근로소득증대세제안이다.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은 임금을 상승 시킬 여유가 있고, 대응교섭력(기업별 노조체제로 인한 대기업 중심 노조 조직화)이나 동일업종 비교임금 압력(대기업 분포산업의 독과점적 구조)이 크기 때문에 임금인상의 가능성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지만 소득대비 소비를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에서 대기업 근로자

는 62.2%이다. 즉 월급에 62%만 소비한다는 것이다. 임금이 늘어난다고 해도 소비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작 소득증가가 필요한 저소득층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고 이미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소비 진작은 미지수인 세제개편안 인 것이다.

매달 정기적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임대소득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외조항이 많아 철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임대소득은 연간 44조원인 상황에서 임대소득 비과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다. 전월세를 사는 가구는 750만 가구인데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는 8만3,000명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해 연간 주택임대료를 추정하면 총액만 44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승계지원 공제대상을 기존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기업승계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율의 완화 추세는 계속 돼왔다. 2008년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의 경우는 2008년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16배, 공제율은 20%에서 2014년 100%로 5배로 대폭 확대됐다. 이런 지속적 확대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성격이 강하다. 외국에서 공부하던 자식이 갑자기 와서 경영인이 되는 우리나라의 형태로는 기업(家業) 상속이 아니라 기업(企業)상속으로 변질되는 문

제가 발생한다. 물론 중소기업을 활성화 정책은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기업 승계 제대와 중소기업 활성화 제도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부족한 세수는 조세저항이 적은 서민에게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명분은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인상분 2000원을 살펴보면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외에 사치품등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반영하고 담배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했다. 건강증진의 목적이 아닌 세수 확보의 목적이 있다고 명백하게 나타난 것이다. 더욱이 2011년 기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다. 이를 근거로 담배값이 4,500원으로 인상시 각 소득수준별로 세부담을 분석하면 소득하위 25% 흡연자(8,177억원)가 소득상위 25% 흡연자(6,399억원)보다 1,778억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드러나서 담배값 인상이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다른 세금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하루 1갑 피운다고 가정하면 시가 9억원 아파트 소유자의 1년간 재산세액인 것이다. 담배는 끊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를 이용해 저항없이 세수를 확보하려는건 아닌건지 되묻고 싶다.

담뱃세에 이어 주민세도 1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에 따라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 이내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인두세로 소득과 상관 없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소득역진적이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주민세 인상은 세수규

경제정책팀

2014년 11월 12일

[2014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세 목	주요 내용	
배당소득 증대세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여 소액주주 세부담 경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 허용
	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 배당소득 고소득자에게 9천7백억원 감세혜택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의 대주주 및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감세로 공평과세를 저해하므로 폐지되어야 함
근로소득 증대세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 신설
	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이 소비성향이 높아 대기업 근로자에게 유리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정 보완 필요
기업소득환류세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추가과세(단일세율 10%)
	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들이 과세대상금액과 같은 액수만큼 투자·임금증가·배당으로 지출했다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유보자금의 60%에 과세할 경우 대기업 10곳 중 과세되는 곳은 현대모비스 1곳에 불과.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에 실질적 적용을 위한 세밀한 범위 설정 필요
임대소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3년간 한시적 비과세(14~16년 소득분) 후 분리과세(17년 소득분부터)
	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임대소득 44조원인 상황에서 임대소득 비과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주택 이상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비과세없이 원칙적 과세
기업승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하여 기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중소·중견기업(매출 3,000억원 미만)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의 100%(500억원 한도) 공제
	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한도, 공제율 대폭 확대로 세금없는 부의 대림 심화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도한 혜택이므로 공제한도, 공제율 한도 현행 유지 필요
담뱃값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상분 2000원에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외에 개별소비세도 반영하고 담배에 물가연동제를 도입 2500원의 담배 1갑 가격 중 세금과 부담금이 62%(1550원) ▲담배소비세 641원→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841원 ▲지방교육세 321원→443원 ▲부가가치세 234원→433원 등으로 오른다. 여기에 개별소비세 594원이 새로 부가
	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하위 25% 흡연자가 상위 25% 흡연자보다 1,778억 세금 더 내 국세인 개별소비세 신설해 서민증세로 1조7천억원 세수 확보 하루 1갑 흡연시 시가 9억원 주택의 1년 재산세액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증진이 아닌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증세이므로 폐지되어야 함
주민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2014년 평균 주민세 4,620원
	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과 무관하게 부과되어 소득역진적 인두세로 가족수가 많을수록 부담 2015년 주민세 1인당 세수 규모는 7000원, 7000원 중 2000원이 징세비용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역진적이며 서민증세이므로 폐지하고 현재 소득세납부액의 10%로 규정된 지방소득세율을 11%로 조정하여 징세비용 절감, 소득분배 역진성 문제, 조세형평성 문제 해결
자동차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까지 100% 인상 자가용 승용차는 제외하고 택시, 승합/화물 자동차등 일부에 대해 적용
	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층에게 1천5백89억원 세부담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용 택시기사 소득이 열악한 현실에서 추가적 세부담부여는 부적절함으로 폐지

모가 별로 크지 않아 크게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단박에 해소 시켜줄 순 없다. 주민세를 인상시켜 거둬들이게 되면 추가적으로 징세비용이 발생한다. 이 방안보다는 현재 소득세납부액의 10%로 규정된 지방소득세율을 11%로 조정하는 것이 징세비용도 절감하고 소득분배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며 조세형평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자동차세 인상도 잇달았다. 이번 자동차세 인상에는 소득 능력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제외되었으며, 서민층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에만 세율 인상이 적용됐다. 결국 자동차로 먹고 사는 사람에게 세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떠 안게 될 세금 부담은 1천5백89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증세대상중 가장 대표적인 대상은 영업용 택시다. 택시가 소득이 열악한 현실에서 추가적 세부담은 멈춰야 한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전혀 못하는 조세정책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로 우리나라는 물론 OECD 국가에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소득 불평등 심화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적절한 재정지출과 조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조세제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못하고 있다.

OECD 국가중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꼴지를 기록했고 소득세에 대한 재분배 효과도 다

른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았다. 소득세는 세율은 올렸지만 다양한 감세혜택으로 여전히 고소득층과 대재산가에 유리하고 한번 내린 법인세는 제자리를 찾을 줄 모른다.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상속·증여세도 점점 공제한도를 늘려주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불평등은 날로 심해지고 가고 있는데 정부는 소득불평등 심화에 무감각하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들만 계속 발표 하고 있다. 조세정책으로 세워야 할 사회적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마라

박근혜 조세정책은 결국 있는 대로 생색내고 혜택은 소수의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감세에 대한 부담은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혜택은 남이 보고 부담은 내가 책임지니 국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명백한 증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정부는 눈속임식 정책으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체계적이고 공정한 세금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서민증세는 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증세 논의는 이제는 꼭 필요한 시점이다. 소득세·법인세 인상, 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과세 같은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직접적 증세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무너진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다.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 어떻게 되는 걸까?

기업들이 공개하지 않는 상품권 낙전수익, 문제와 해법은?

권태환 시민권익센터 간사
dopj@ccej.or.kr

지난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국내 상품권 시장은 연평균 3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한해만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8조 2,79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됐으나 상품권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가 지난 상품권이 기업에 귀속되는 불로소득인 낙전수익은 더욱 더 파악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상품권은 대체 얼마나 발행되고 있는 것이며 그 중 어느 정도가 낙전으로 이어지는 것일까?

작년 한 해 총 8조 2795억원 상품권 발행, 연간 약 30%씩 성장

국내 상품권의 약 90% 이상이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8조 2,79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됐다. 지난 2009년 발행된 3조 3,783억원과 비교해보면 5년새 145% 증가됐으며 연간 약 3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올해 낙전수익 846억원 예상..향후 연간 2천억원 이상이 기업 수익으로 귀속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국세청의 「인지세법」에 의한 상품권에 부과된 인지세와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되는 상품권의 발행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나, 인지세는 1만원 이하는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구간별로 부과돼 정확한 규모의 파악은 힘들고, 한국조폐공사는 상품

권 발행량은 기업의 영업 기밀에 속해 공개하지 않아 파악이 불가해 정확한 낙전규모 파악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경실련은 상품권을 주요 상품으로 판매하는 (주)한국문화진흥(문화상품권), (주)해피머니아이엔시(해피머니아문화상품권), 한국도서보급(주)(도서문화상품권)을 대상으로 낙전규모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상품권 발행 기업들의 최근 5년간 낙전수익을 살펴보면 (주)한국문화진흥은 223억원, (주)해피머니아이엔씨는 169억원, 한국도서보급(주)은 79억으로 이들 3사의 최근 5년간 낙전수익은 총 471억원에 달하며 평균 2.5%의 낙전률을 구했다.


이렇게 구해진 낙전률을 전체 상품권에 적용한다면 2009년도에 발행된 상품권 3조 3,783억원은 5년 뒤인 2014년도에 846억원의 낙전이 예상되며, 2013년도에 발행된 상품권 8조 2,795억원은 5년 뒤인 2018년도에 2,074억원의 낙전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즉, 2018년도 이후에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낙전수익이 해당 기업의 수익으로 그대로 귀속될 예정이다.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를 위한 관련 법률 마련 시급

1999년 법 폐지 이후 현재 상품권 관련 규제

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 「상품권 표준약관」 및 기획재정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인지세법」 등 약 10개의 간접적 규제만 있다. 상품권을 관리하는 법률의 부재로 상품권 낙전수익이 모두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해 각종 범죄(비자금 조성 및 리베이트 등)에 이용되거나 국내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상품권 발행 및 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낙전수익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현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과 복권당첨금은 서민금융지원 및 복지사업지원 등 공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수백억씩 발생하는 상품권의 낙전수익은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을 미리 받아 사업운용 및 이자수익 등을 취하는 등 기업에 일방적으로 귀속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낙전수익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운동을 향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전체 상품권의 낙전 추정액 (2009~2013)

(단위 : 백만원)

발행시기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발행액*	1,936,720	2,235,650	3,526,220	4,478,740	6,407,625
(평균 낙전율 2.5%)	819,435	1,163,775	732,355	932,220	917,865
낙전 발생 시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낙전 추정액	139,875	198,940	299,605	551,524	597,280

*강석훈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삼성그룹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과정에서 금산분리 특혜를 해소하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관련 경실련 입장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권오인 경제정의연구소 팀장
ok@ccej.or.kr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임에도 불구하고 11월 13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는 취재기자들로 북적였다. 11월 14일 삼성SDS 상장을 앞두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과 경제·경영학자 108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때문이다. 이는 삼성그룹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영향력 때문에 최근 지배구조개편 과정에 있는 삼성그룹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있다는 뜻이다.

과거 삼성그룹은 2세와 3세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차명주식 등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승계를 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경영권을 승계 받은 총수 일가는 금산결합과 환상형 순환출자고리를 활용해 소수지분으로 그룹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최근 삼성그룹은 구조조정, M&A 등으로 순환출자고리는 줄어, 오는 12월 18일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이 상장될 경우 10개의 핵심고리만 남게 된

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라는 과도한 금산결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에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의 핵심 쟁점을 몇가지 짚어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삼성그룹 소유지배구조 핵심쟁점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동일인이 지배하는 체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

- 경제·경영학자 73.1%(79명), 삼성그룹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지배구조모델로 '일반주주 및 금융지주가 완전히 분리된 지주회사 체제' 응답

삼성그룹은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핵심 출자고리를 중심으로,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전지, 삼성SDI, 삼성물산 등 8개 기업들이 순환출자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환상형 순환출자고리에 대해서는 삼성그룹이 축소해, 14개가 존재하고, 제일모직이 상장될 경우 삼성카드의 제일모직 보유지분이 해소돼 10개로 축소된다. 하지만 중요한 핵심 순환출자고리는 유지되고 있고, 무엇보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고리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환출자의 해소만으로는 소유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삼성그룹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결합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동일인이 지배하는 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를 털어내고 금융과 산업자본이 완전 분리된 체제로 갈 것인가가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경실련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삼성그룹이 '일반주주

및 금융지주가 완전히 분리된 지주회사 체제'로 가야한다고 응답했으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결합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위기→삼성생명의 위기→보험계약자와 그룹전체 및 국가경제의 위기로 전이되는 리스크를 반드시 해소해야

기자회견 다음날인 11월 14일 기자회견보에서는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아마 '몰빵'이란 표현 때문일 것이다.

- 오늘의 말말말 -
"삼성생명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이른바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14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과다 보유한 것에 대해 한 말.

주) 11월 14일 기자회견보 '오늘의 말말말' 인용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몰빵이란 표현에 딱 맞는 말이다. 즉 삼성생명의 자기자본이 2013년 말 기준 18조4,766억원 정도인 가운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는 11월 10일 종가기준으로 14조1055억원 정도가 된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7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엄청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휴대폰 사업 등 주력 사업의 부진으로 삼

월간 경실련

2014년 11월 12일

성전자는 최근3분기 영업이익(4조600억원, 전년동기 대비 60.05 감소)과 매출(47조4500억원, 전년동기 대비 19.69%감소) 감소가 발생하는 등 부진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런 삼성전자에 위기가 닥친다면, 과도한 주식 보유를 하고 있는 삼성생명에게 그 위험이 그대로 전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위험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의 위기, 순환출자로 형성돼 있는 그룹전체의 위기,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로 삼성그룹은 2013년 매출액(333조8,920억원)이 우리나라 GDP의 23.4%, 총자산(558조7,770억원)은 GDP의 39.1%에 해당한다.

삼성생명의 특혜 해소 차원에서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처분해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금산법 상 특혜(5% 초과보유 금지지만 삼성생명은 현 삼성전자 주식을 7.5% 보유) 뿐 아니라, 보험업법으로도 특혜를 받고 있다. 즉 현재 은행, 증권 등 타 금융기관의 경우 건전성 규제를 위해 보편적으로 계열사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시장가액으로 하여, 보유한다 설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만 예외로 산정기준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총자산의 3%까지 허용해 주고 있어 형평성에 위배되고,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만약 보험회사 또한 자산운용 산정기준을 시장가액로 한다면, 11월 10일 종가기준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의 주식가격은 14조1,055억원으로, 2013년 말 기준 삼성생명 총자산 191조34억원의 7.4%에

해당해 보유한다를 4.4%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초과 보유지분인 4.4% 즉, 8조3,753억원은 매각해야 한다. 따라서 삼성이 타 금융기관 건전성 기준과의 형평성과 리스크를 고려해서라도, 보험업법 개정여부를 떠나 최소한 시장가로 환산한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매각해야 함이 옳다.

삼성그룹은 반드시 금산분리가 이뤄지는 상속계획과 소유지배구조 변경계획을 투명히 밝히고, 이를 단행해야
 - 경제·경영학자 77.8%(84명),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

11월 삼성에스디에스의 상장으로 이재용 부회장(11.25%), 이부진(3.9%) 사장, 이서현(3.9%) 사장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스디에스의 지분 가치가 11월 12일 종가인 주당 36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5조3071억원에 이른다. 언론에 따르면 총수일가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인수, 액면분할, 증자, 합병 등으로 주당 1천180원에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주당 300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개편 과정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불투명한 진행으로 본인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으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유지배구조개편 계획 공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계획을 투명히 밝히고 진행하라는 이유는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 때문일 것이다. 즉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는 일개 집안의 문제로 볼 수 없고, 국가경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반드시 금산분리가 이루어지는 지배구조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이것은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이뤄진 세습과정을 거쳐 삼성그룹을 승계하는 총수일가가 한국 사회와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책무일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 또한 총수일가와 재벌의 이익보다는 국민과 국가경제의 공익을 위해서라도 무관심에서 벗어나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경제·경영학자 108명 설문조사결과

1. 삼성그룹이 해결해야 할 지배구조개편 과제로는
 - ▲ 75.9%(82명), 복잡한 순환출자고리를 활용한 소수 지분 총수일가의 그룹지배
 - ▲ 51.9%(56명), 총수1인의 황제경영으로 인한 계열사 독립경영체제 결여
2. 삼성그룹이 해결해야 할 경영과제에 대해서는
 - ▲ 48.1%(52명), 세습경영 ▲ 33.3%(36명), 새로운 그룹 수익모델 창출 ▲ 31.5%(34명), 상생경영부족 ▲ 26.9%(29명), 무노조경영 ▲ 26.9%(29명), 그룹이익을 위한 정관계 로비
3. 경영권 3세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계획의 투명한 공개 관련
 - ▲ 77.8%(84명),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행해야 한다
4.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드러났던 이근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재출연 약속에 대해

▲ 80.6%(87명), 즉각적인 사재출연 계획 발표와 이행

5. 삼성그룹이 3세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에 대해

▲ 55.6%(60명), 증여 및 상속세 정상 납부 ▲ 37%(40명), 경영권 승계 절차에 대한 투명성 확립 ▲ 32.4%(35명), 공정거래법 및 기업관련법 등 준수 ▲ 29.6%(32명), 재단설립, 우회상장 등 편법승계 금지 ▲ 26.9%(29명),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 준수

6. 삼성생명 등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장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 63%(68명), 기준가를 은행과 같이 시장가(공정가액)로 변경하되 계열사 보유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매각하도록 해야한다

7. 삼성생명 등 보험사의 투자손익 배분비율을 취득시점으로 변경하고, 보험계약자의 자산 및 손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에 대해

▲ 52.8%(57명), 유배당보험계약의 자산 및 손익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자산형성 기여를 인정해 투자손익 배분비율 산정 시점을 자산 처분시점이 아닌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8. 삼성그룹이 향후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지배구조 모델에 대해

▲ 73.1%(79명), 일반지주 및 금융지주가 완전히 분리된 지주회사 체제



북한 인권과 남북 대화, 이렇게 풀어라

북한 인권 문제 무시할 수 없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서보혁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 오찬하는 남·북 고위대표단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방남한 북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영빈관에서 김관진 국방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 우리 측 관계자들과 식사하기 전 대화를 하고 있다.

남북 외교 경쟁이 인권 문제에 미치는 영향

지난 9월 말, 뉴욕에서 열렸던 제69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의 외교경쟁이 재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포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상기하며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북한이 흡수통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독일 통일도 언급했다.

연설 하루 전인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는 한·미·일 3국 외무장관이 주도한 ‘북한인권고위급회의’도 열었다. 북한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거부당했다.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직후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

방위원회 등 관련 기구와 관영언론을 동원해 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박 대통령의 연설에 맞서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9월 27일 총회 연설에서 핵개발을 “평화와 안전의 문제이기 이전에 한 회원국의 생존권과 자주권 문제”라며 “그 무엇과 바꿀 흥정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를 인권보다 우위에 두고 핵개발을 인권과 연계시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변화이기도 하다. 유엔은 미국의 조종 하에 있는 기구라고 애써 폄하해온 북한이 15년 만에 유엔 총회에 외무상을 파견했다. 리 외무상은 “인권문제를 특정한 국가의 제도 전복에 도용하려는 온갖 시도와 행위에 반대한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 나라들과 인권 대화와 협력을 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인권 대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 외무상의 뉴욕 방문을 앞두고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13일 북한은 최초의 인권백서라 할 수 있는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보장제도-인권실태-인권정책-제약요소-인권개선 전망 등의 순서로 구성된 상당한 분량의 보고서다.

비록 대부분 북한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리 외무상이 언급한 것처럼 인권 대화 관련 수용 입장과 그 조건에 관한 부분이다. 북한은 2000년대 초 유럽연합과 정치와 인권에 대해 대화를 진행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유럽연합이 유엔 북한 인권 결의 채택을 주도하자 대화를 중단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그 전례를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인권 대화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인권대화를 반대한 적이 없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인권대화를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도구로, 정권교체를 위한 범죄행위에 ‘합법’의 외피를 씌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유엔 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북한인권 언급 이후 남북 간 상호 비방이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최측근 인사 3명이 남한을 전격 방문해 남북관계 개선 의사를 천명했다. 북한의 이런 행보가 무엇을 뜻하는지 진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제관계에서 인권문제, 특히 적대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인



권문제는 실제와 명분, 목적과 도구의 양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박 대통령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을 언급한 것도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실제(목적)의 측면과 향후 남북 대화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명분(도구)의 측면이 동시에 반영돼 있다. 우리의 인권 문제 언급에 북한이 격렬하게 반응하면서도 남북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두 측면을 분리해서 대응하며 남북 대화를 복원하려는 전략이다. 실리 추구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인권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큰 문제이다.

남북 인권 대화의 조건과 추진 방향

뉴욕에서 윤병세 외무장관과 리수용 외무상은 각각 인권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남북 관계 발전과 분단 극복을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의 방향으로 풀겠다는 의향이다. 매우 중요한 의미다. 윤 장관이 “북한이 납북자 문제, 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남북 인권 대화의 기본 의제를 언급한 것이다. 적절한 입장이다. 문제는 앞을 예측할 수 없고 신뢰가 턱없이 부족한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남북 인권대화가 언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자칫 대화의 모멘텀이 발전하기 전에 대북전단 살포, 유엔에서의 강도 높은 북한 인권 결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대북 군사협력 강화 발표 등이 이어지면 인권 문제는 또다시 인권이 아니라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비중을 높이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시기와 방식이 남아 있지만 국제사회에 공약한 이상 남북은 인권대화에 나설 준비를 할 것이다. 앞으로 남한의 북한 인권 정책은 국제 여론과 남한의 이해가 고루 반영된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예상되는 의제에 맞춰 적절한 협상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초기 대화에서 주 의제는 전쟁과 분단으로 파생된 인도적 문제의 해결이다.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다소 민감한 정치의 자유, 시민의 권리 문제

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다뤄야 한다. 남북 간에는 지원과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상호 신뢰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식량 지원 및 의료 지원 등의 남북협력 프로그램은 실질적 인권 개선과 남북 신뢰구축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통일 환경 조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이는 남한의 북한 인권 정책이 다른 나라의 인권 정책과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인권 개선은 선후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병행 추진해야 한다.

북한 인권은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와 별도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이명박 정부의 실험에서 실패로 나타났다. 남한의 위상과 남북 관계를 무시하는 태생적 문제였다. 박근혜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방향이 이명박 정부를 답습한다면 인권 대화는 불가능하다. 남북 관계와 북한 인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결정 집단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책수단의 합리적 배합이 요구된다. 남북 인권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면 그 다음은 그것이 가능한 조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향후 남북 인권 대화를 위해 우리 정부는 다음 네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차분한 준비를 해나가는 한편 북한과 신뢰를 회복해 가야 할 것이다.

- ▲ 인권 대화는 북한의 인권 개선 역량 강화를 기본 목표로 하고, 보편 가치의 전 한반도 구현을 궁극 목표로 삼아 일관되게 전개해 나간다.
- ▲ 인권 대화의 의제는 인도적 문제에서 출발해 남북간 상호 합의와 남북관계 발전 정도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 ▲ 인권 대화의 방식은 정부간 대화와 함께 민간 채널과 1.5트랙을 병행한다.
- ▲ 정부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인권 대화의 실효를 극대화 한다. **경**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현지시간)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유엔 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경실련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는 회원이 되고 싶어”

조건영 회원 인터뷰

정지영 회원홍보팀 간사
ji500@ccej.or.kr

경실련이 태어난 지 스물 다섯해를 맞이해 지난 11월 4일, 경실련이란 이름으로 인연을 맺었던 분들을 모시고 '창립 25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어 기꺼이 와 주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신 회원님들 중에 조건영 회원님은 올해 가입하신 신입회원입니다. 경실련에 대해 좀 더 가까이에서 알고 싶어서 오셨다는 말씀에 반가우면서도 죄송스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회원님들을 위한 유익한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조건영 회원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현재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서울시설공단에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Q. 지금 회원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있다면요?

A.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삶을 이야기하는 것. 휴일에 아내와 커피 마시며 데이트를 즐기고 중1, 3 딸들과 프리허그 하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며 예배드리고, 어린이 클럽 활동을 참여해 순수에 잠시라도 머물며, 하늘나라를 꿈꾸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 정기적이진 못하지만 수영을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되어간다는 것. 살아갈수록 삶의 맛

이 느껴지고 더 행복해진다는 것.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밤 늦게 돌아오는 길 그리고 아주 가끔 배운 것을 업무와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하게 만듭니다.

Q. 이번 후원의 밤에 참석하셨는데, 어떠셨나요?

A. 경실련이 어떤 단체인지 아직 모르는 신입 회원으로 기념식에 혼자 참석하는 것이 약간 부담스러웠는데 반가이 맞아준 정지영 간사님이 고맙습니다. 경실련처럼 누군가가 어디선가 무언가를 하고 있기에 내 삶과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5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경실련에서 활동하신 분들의 노고가 많았으리라 여겨집니다. 더불어 우리 부서 막내가 마흔 살인데 얼마 전 신입사원이 3명이나 배치됐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 그냥 즐겁고 좋아 보이고

기대가 됩니다. 경실련 회원으로 가입한지 1달 밖에 되지 않은 신입회원으로서는 경실련에서 지금 나의 의미는 마치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며 언젠가 때가 되면 의미있는 역할을 하는 회원이 되리라 기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저녁 음식이 참 맛있었습니다.

Q. 회원님이 생각하시는 올 한해 가장 인상적인 이슈는 무엇인가요?

A.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아픔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나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됐고 경실련에도 가입했습니다.

Q. 201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돌아보면 어떤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A. 경영학 박사공부를 시작했는데, 20년 토목기술자 직장인으로서 시간을 내는 것도, 수업내용 이해하는 것도 어렵네요. 이 선택이 '용기'인지 '만용'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의미를 가져봅니다.

Q. 2015년엔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요?

A. 좋은 리더와 팔로워가 되는 것, 미국 동부여행, 의미있는 논문 주제선정, QT로 온유한 마음 갖고 걱정 근심 안하기, 일기 쓰기, 자녀들이 비전 갖는 것과 반에서 1등하도록 기도하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Q. 회원님이 꿈꾸는 우리 사회.. 어떤 모습인가요?

A.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 주변 기존 아파

트에는 어디나 '시끄러워 못 살겠다. ○○건설 보상하라'는 현수막 문구가 '이웃이 생겨 기쁘네요. 좋은 집 짓는 ○○건설이라면 먼저, 소음문제는 알아서 잘 하시겠죠!!'로 바뀌고, 끼어드는 차량에게 크락션을 울려 불특정 다수에게 무례하지 않은 사회를 꿈꾸어 봅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문화, 약자는 물론 강자도 배려하는 문화, 거짓말이 가장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Q. 경실련이 꼭 해야 한다는 게 있다면요?

A. 경실련이 해야 할 일은 많을 것입니다. 제가 경실련을 찾은 이유입니다.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건설분야는 가장 취약한 산업분야에 속하고 그 중에서 중소기업 건설산업은 아직 제도적 어려움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인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적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건설 산업분야의 경제정의와 문화적 수준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문화 수준의 지표라고 보며 경실련이 당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복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어떤 일을 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건영 회원님은 이 세가지를 모두 다 가진 가장 행복한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실련 회원으로 만나게 된 조건영 회원님, 2015년에도 계획하신 일들이 순차적으로 모두 다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경실련이 지녔던 초심의 회복과 열정어린 노력이 필요한 때

경실련 창립 25주년 기획토론회① 경실련 25년, 시민운동과 경제정의

박지호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jhpark@ccej.or.kr



▲ 지난 10월 31일 경실련25년, 시민운동과 경제정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31일(금) 경실련은 '경실련 25년, 시민운동과 경제정의'라는 주제로 창립 25주년 첫 번째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 최초의 시민운동단체인 경실련은 1989년 7월 8일 창립해 올해로 출범한지 25주년을 맞이했다.

토론회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의 '경실련 25년, 시민운동의 평가와 전망' 발제로 시작했다. 김 교수는 경실련은 '온건하고도 대중적인 시민운동을 통한 사회개혁을 달성'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인 절차와 질서'를 중시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실련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계급인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주택소유계급과 무주택계급, 생산자계급과 불로소득계급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간 맑시즘에서 비롯된 유산자와 무산자로 나뉘는 계급인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경실련이 25년 동안 ①시대사적인 맥락 속에서의 역할로서 한국사회를 개혁하는데 개혁의 지지세력의 구축과 이의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 ②사회운동의 새로운 모델로서 시민운동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 ③한국사회에서 참여 민주주의의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 ④연대기구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여타 군소 시민단체들의 발전과 정책능력의 배양에 기여한 점 ⑤정부나 기업이 시민단체와 함께 한국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국정관리체제(governance)를 구축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점을 긍정적인 의미와 역할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상근자 등 인적자원 관리, 윤리의식 부족, 회원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

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경실련 전체의 인식구조가 적절한 적응과 변형을 꾀하지 못한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IMF 이후 등장한 비정규직 문제 등 생산자계급의 분화과정 등에 대해 적절한 시각변화와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해 사회적 부정의에 접근하는 효율성이 급격하게 저하됐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경실련이 운동방식에 있어서도 구태의연한 운동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언론이 이전과 같이 우호적이지 않고 정보화 시대임을 감안하여 팟캐스트와 같은 다양한 운동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경실련이 지난 25년간 온건한 중도층을 포용하는데 성공해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늘날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과도한 정치적 편향성을 띤 일부 시민단체들의 난립으로 그 순수성이 훼손되면서 시민들의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실련에 엄중한 중립성을 바탕으로 비정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홍재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은 경실련의 25동안 시민경제, 정치주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건강한 시민사회운동을 추진해 온 것에 대해 인정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재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서로에 대한 오해와 무관심은 결국 시민들의 외면으로 이어졌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진지한 성찰과 합리적 보수단체와 합리적 진보단체가 함께 합리적인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역시 경실련과 기업계가 각자가 추구하는 경제정의 개념의 차이로 인해 상호 대립적인 관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경실련이 추구하는 경제정의가 자유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시장실패의 치유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관례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다.

서울신문의 김종면 수석논설위원은 오늘날 경실련은 특정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상대적 특화전략을 세워, 백화점식 시민운동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경실련이 지방자치·지방분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 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론 등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민운동, 시민단체 영역에서 선거와 선거사이 통제기제로써 작동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권력분립을 위해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늘날 피케티 열풍을 예로 들며 극심한 부의 양극화의 진행에 대한 분배 문제를 보다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김운호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는 25년이 지난 오늘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라는 주제가 경실련 창립 당시와 비교해 지금 얼마나 구체적으로 개선됐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경실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경실련이 추구해온 가치가 현재 유효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비전과 사명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정현근 운영위원장은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경실련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 외 사업은 과감히 독립시키거나 다른 전문 시민단체가 담당하도록 해야하는 문제에 대해 다른 단체들과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시민사회의 강한 연대 문제에 있어서도 더욱 노력하고 고민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여러 지표와 함께 경실련의 정체성 확보에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나아가 공공성을 중시하는 선비정신을 현대에 접목시켜 좀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사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경**

과연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한국경제 발전모델은 무엇인가

경실련 창립 25주년 기획토론회② ‘한국경제 발전모델 모색’

최예지 경제정책팀 간사
cyj@ccej.or.kr



▲ 지난 11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시작된 한국경제 발전모델 모색 토론회

한국경제는 세계가 놀랄만큼 성장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우리들은 쉬지 않고 일하지만 지갑은 점점 얇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소득은 점점 양극화되고 있다. 이런 반복적인 문제를 어디서부터 끊어야 할지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한국경제가 정의롭고 맘껏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경실련 창립25주년을 맞아 기획했다.

지난 11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인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한국경제 발전 모델 모색' 토론회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김호균 교수(명지대 경영정보학과)가 '정의로운 성장의 방향과 실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정의로운 성장은 무엇인가?

'왜 다시 정의인가?' 라는 발제에서는 30년간 신자유주의 성장 모델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불평등의 심화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불평등이 해소 모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준거점은 정의라 이야기했다. 그리고 불평등이 완화 될 때 인간 행복지수 상승하고 성장을 위해서도 재분배가 되어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을 위한 성장, 어떠한 성장인가, 성장의 질을 규정할 때의 척도가 정의와 평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도 정의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하다 주장했다. 한국사회에서도 성장 자체가 아니라 성장의 질과 목적을 둘러싼 논쟁으로 논쟁구도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으로 부각됐다. 바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뒷받침하는 보편적 가치가 정의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탐구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민생 법안, 규제 완화 정책은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의 내용은 어떤가?' 라는 발제에서는 정의에 대한 개념 정리를 했다. 서구에서는 실적정의와 필요정의 사이에 논란이 있었고 사회정책 논의에서는 필요정의와 욕구정의가 구분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다양한 정의 개념이 제안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생태계 보전, 재정 건전성 등을 포괄하는 세대정의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밖의 정의 개념 등을 설명했다.

한국 사회에서도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세대 정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이에 기초한 정책 평가와 대안 제시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첫 단추로써 출발정의, 기회정의가 구현돼야 한다는 점에는 거의 합의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양극화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대안적 성장모델이 제안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 사회적 성장모형, 포용적 성장모형, 장하성 교수의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 모델을 소개했다.

이후 발제자가 정의로운 경제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내수 촉진을 주장했고, 금융시스템 개혁은 금융규제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공공투자와 산업정책에서는 민영화 부분에서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 만큼 국가소유가 바람직한 형태이며 교육,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공공투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생태적 산업정책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이 필요하고 감세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된다 주장했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소득평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지출을 늘려야 함으로 세계적 감세경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노동자, 하청기업, 소비자, 지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경영 논의에 참여해야 된다고 밝혔다. 노동정책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임금을 생산요소로 볼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소득으로 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쳤다.

첫 토론자로 나선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자본주의가 전환점에 와있고 새로운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발제자가 지적한 불평등 문제, 성장의 한계점을 어떻게 풀 것이냐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방법론을 고민해야하고 명제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최근에는 소득이 늘어나는 성장

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방법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력한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재분배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재분배가 가능 할 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밝혔다.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늘려가는 노력을 동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 혁신인 일어나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성장이 부가가치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보다 혁신을 만들어내고 권장해야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우리 경제는 지금보다 높은 성장률이 필요하고, 우리 내수시장에서 더 높은 성장이 어렵다고 밝히고 해외시장의 외연확대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내수확대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근본적 규제완화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에 대해서 산업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은 다른 산업과는 다른 리스크가 있는데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공공부분의 주장에 대해서 실증적 논거가 충분한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생태산업이 전체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또한 기업의 투자 증가와 법인세 인상 주장은 서로 상충 되는 것 같다고 밝히며 투자 확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인세는 감세



▲ 이번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이광택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선한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앨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으며 역사적으로 검증된 신자유주의 성장논리가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는 정의에 대한 대중적 갈증이 크다고 밝혔고, 복지 예산싸움은 미래위에 쌓은 성 같다고 이야기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수단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최경환 경제팀용어의 탈취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소득주

도 성장을 제대로 하려면 모든 연구단체들이 정책수단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최경환 팀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가 이야기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없애는 것이 정의인가라고 되묻고, 비정규직이 임금이 높아야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로운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성장 모델과 관계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설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다. 현재는 연대

가 중요하며 1965년 미국 차별금지에 버금가게 연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현재 한국경제는 가치분소득이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성장 모색이라는 제목은 국민이 갖고 있는 불평등함에 대한 분노, 억울함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데는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제자가 제시한 6가지 모델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단순한 복지 증가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정책을 제안하고 이것이 정의라고 주장했다. 정의는 적극적인 개인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유, 적극적 복지,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자리를 잡을 때 혁신적 경제가 이뤄질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가 커다란 위기이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초창기라고 밝혔다. 과거 개발 시대에는 재벌 대기업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우리나라 다수 국민들을 중산층으로 도약하게 해줬으나 이제는 총 취업자의 10%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그나마도 조기퇴직의 위험이 매우 큰 일자리이며 이제는 재벌 기업들이 한국 경제·사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위기에 대해 그리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관찮은 일자리들이 줄어들면서 중산층에 속했던 상당수 국민들이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기 퇴직자들이 자영업자로 돌아섰으며 창업한지 2년 내에 80%가 도산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나 방법이 있냐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자의 금융시스템 개혁 부분에서 금융과 실물을 떨어뜨리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는 미래 경제가 불투명하면 안하므로 기업투자에 관해서는 발제자가 놓치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세 부분에서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고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노동시장 정책에서 경제 선순환 고리 형성은 정부에서 몇 년째 하려고 하나 잘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요인 이므로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이고 경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일곱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경제정책은 여야 모두 비슷하며 어떤 것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포인트가 야당쪽에는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정책에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은 내 입에 밥을 넣어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밥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 경제의 현안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이 없으면 남의 것을 뺏는 시스템 밖에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으며, 한국사회에서

의 세대간 단절이 심각한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젊은 사람들의 경제적 불능과 정치적 무력감은 결국 성장률을 좀 먹기 때문에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성장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청년고용에 관해서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경제정책은 시민사회가 아닌 정부에서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덟 번째 토론자인 전창환 한신대 교수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장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다양한 사회 문제, 청년 문제, 관피아 등의 문제가 적체되고 있다 밝혔다. 또한 새로운 정의로운 성장 담론 제시보다는 경제민주화-복지국가 담론을 발전시키는게 어떨까? 경제가 모호하다고 밝혔다. 발제 내용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문제가 빠져서 아쉽다고 밝혔으며 자영업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시스템개혁은 관치금융을 해결하고 제대로 빠르게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한국경제는 재벌개혁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발제 내용에서 재벌개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현재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면서 인구감소,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 걱정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서는 정부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가 우리가 갈 길이라고 밝혔다. 정의롭지 않은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아무런 해결 내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150년전 갑오개혁, 농민운동 할 시기와 현재가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지금의 관피아들이 그 시대 탐관오리와 다를 것 없다고 주장했다. 부자감세라는 것 때문에 정부의 갈 길을 잃었다. 알리바바, 샤오미 등 20년이 안된 중국의 회사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세계를 선도하는데 한국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며 이는 재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창조경제 하자면서 벤처 지원은 반대하고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경실련 기획토론회2 '한국경제 발전모델 모색' 토론회는 정치적 이념, 학문적 이념 등을 모두 넘어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간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한국경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와 해결점들을 제시했다. 이런 의견들이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돕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본다. **경실련**

“모두가 노력한 만큼 잘 사는 날이 빨리 오도록 경실련이 더 노력해야”

경실련 창립 25주년 기념 후원의 밤

정택수 사회정책팀 간사
wildwylde@ccej.or.kr



▲ 지난 11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실련 25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행사에서 참석한 경실련 회원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11월 4일,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경실련 25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25년전 경실련의 창립정신을 되새기는 한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경실련에 큰 힘을 보태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뜻 깊은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1989년,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의 실현하자”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창립된 경실련이 올해로 스물다섯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경실련 25주년을 축하하며 창립정신을 되새기고자 25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이 지난 11월 4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실련 회원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후원자들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임효창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선월몽산 경실련 공동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경실련이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넘어 더 넓은 사회문제를 포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밝히며 행사장을 찾아주신 내외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경실련 2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바쁜 와중에 참석해 경실련에서 활동했던 과거를 회고하며 경실련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 20년 회원 감사패를 수여받는 임현진(우), 나태균(좌) 회원

는 경실련이 할 일이 자꾸만 많아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모두가 노력한 만큼 잘 사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도록 경실련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경실련 25주년 기념동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영상에서는 과거 경실련이 탄생한 1989년부터 현재까지 토지공개념 입법추구·금융실명제 도입·아파트값 거품빼기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경실련의 역사를 짚어보며,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25살의 경실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 드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상의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수상자로 선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라고 양심선언을 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날 김이태 연구원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참석하지 못했는데, 기념식에서 직접 뵈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참석자들은 개인적인 성공과 이익보다는 사회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용기 있게 4대강 사업의 진상규명과 향후 활용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알린 김이태 수상자의 뜻을 다시 한번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인 만큼



▲ 윤순철, 박완기 조광현, 김송원 활동가(왼쪽부터)


특별순서로 경실련이 그동안 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먼저 20년 이상 정기적으로 경실련을 후원해주신 회원님께 드리는 20년 회원 감사패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 상은 나태균 회원과 임현진 회원이 수상했습니다.

20년 동안 경실련을 위해 일한 상근활동가에게 수여하는 20년 활동가 공로패는 윤순철 중앙경실련처장, 박완기 수원경실련처장, 조광현 대구경실련처장, 김송원 인천경실련처장이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20년 회원상을 수상한 회원님들과 공로패를 받은 활동가들이 많은 참석자들과 함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실련과 같이 한 지난 시간을 추억하며 미래에 대한 새로

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초대가수의 축하공연이 막간을 흥겹게 채우고, 마지막으로 최인수 공동대표가 나와 어려운 시간을 내어 참석한 회원들과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경실련이 정의의 의미를 채워나가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님과 후원자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행사는 경실련이 25주년에 이르기까지 기여해주신 회원과 활동가들이 함께 했기에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다가올 50주년을 향해 더욱 힘차게 달려 나갈 것입니다. 경실련 화이팅!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의

제69차 유엔총회이야기

이현아 국제팀 간사
hyunah.hana.yi@ccej.or.kr

2014년 9월 16일 제69차 유엔총회가 개막했다. 개막과 함께 많은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박근혜대통령 기조연설'에 관한 기사를 쏟아냈다. 그 외에 실제로 무엇이 논의가 됐고 앞으로 국제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갈 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기사에 손이 꼽을 수 있었다. 우리가 앞으로 고민하며 논의 해야 할 내용을 월간경실련에서 풀어본다.

유엔의 2014년은?

2014년은 새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마감 기한인 2015년을 앞두고 유엔이 향후 15년(2016-2030)동안 달성할 새로운 목표안을 발표한 해이다. 2013년 3월부터 새로운 목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 7월 논의의 결과인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발표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 발표 이후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는 새로운 목표, 해당되는 타겟에 대한 이행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다. 2014년은 유엔 입장에서 정해진 목표를 전 세계에 공유해 의견을 듣고 조율한 매우 중요한 해였고 이는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69차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함해 지구적인 이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회의 일정 및 논의

제 69차 유엔총회 주요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2014/09/16	제69차 유엔총회 개막
2014/09/22-11/20	고위급회담(High-level meetings)
2014/09/23	기후정상회의(Climat Summit 2014)
2014/09/24-30	일반토의(General debate)

16일 개막으로부터 23일 유엔기후정상회의,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24일 고위급회의, 유엔안보리 정상회의 등이 열렸다. 일반토의가 진행되는 24일부터는 Post-2015개발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수단, 의제 논의, 기후변화 대처 방안, 안보, 에볼라 바이러스 확

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의논하는 회의가 주최됐다. 대한민국은 많은 언론에서 접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 △기후변화정상회의 기후재정 세션 모두발언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 △유엔안보리 연설 등을 맡아 유엔총회에서 존재감을 높였다.

일반토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련된 큰 세션이 한 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강화된 보안으로 인해 시민사회 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총회에 참여한 시민사회 일원으로부터 전해들을 수 있었다.

국제시민사회 연대의 장

유엔 내부에서 시민사회 의견을 활발하게 공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총회 기간 동안 국제시민사회는 많은 부대행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제시민사회는 각 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새로운 개발목표를 위해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



▲ Climate march UNGA2014_기후변화 행진

지 어떤 캠페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 나갈 수 있는지 공유하는 장을 가졌다. 특히, 기후정상회의 전날인 9월21일 역사에 유래 없는 기후변화 행진이 진행됐다. 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40만명이 참여했고 162개국에서 2600개의 행진이 같은 날 진행됐다. 이는 국제시민사회 연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방증이 되었다.

국내 시민사회에 주어진 숙제

월간경실련이 발간되어 독자들의 손에 전달될 썸엔 유엔총회에 대한 내용을 담은 반기문 총장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다. 대부분의 세션이 각 국가 정부인사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간 만큼 시민사회는 날카롭고 예리한 눈초리로 이 보고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현재 (11월14일) 국제시민사회는 반기문 총장보고서 발표 이후 각 나라의 시민사회 입장을 취합해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는 협의(consultation) 및 협상(negotiation)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시민사회도 반기문총장 보고서를 이해하고 이에 연대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숙제로 남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총장보고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시민사회의 입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범효과적인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과 경북형 조경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작년 6월 현충일 이후 국립 서울현충원의 일본 나무 제거를 요구하는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스님)의 활동 보도가 눈에 띄었다. 대표적으로 거론된 나무가 가이즈카 향나무(왜향나무)와 노무라단풍(홍단풍)이다. 우리가 무지해서 모르고 있는 대표적인 ‘생활 속 일제잔재’들이다.

도립공원 1호인 구미 금오산에도 지역출신 항일독립투사 박희광 선생 동상 옆에 잘 생긴 가이즈카 향나무가 한 그루 있다. 작년 9월 제거가 아닌 구미시목인 느티나무와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미시에서도 10여 년 전 ‘독립운동가 동상 옆 일본향나무’가 어울리지 않으므로 옮겨 달라는 구미문화원의 건의를 검토했으나, 수령 70여년에 수령도 준수해 아깝다면서 존치하기로 했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구미경실련의 문제제기의 정당성과 여론 기반이 있다는 말이다.

이번에도 구미시는 10여 년 전과 같이 아깝다는 소극적 논리였다. 가이즈카 향나무 옆에 시민들의 찬반을 묻는 게시판을 설치하겠다는 구미시에 중단을 요구한 작년 11월, 구미시의회에 청원서를 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지난 3월 4일, 530만 원을 들여 시목(市木)인 느티나무로 교체했다.

판이 커지게 된 것은 TBC 대구방송의 집중보도를 통해서이다. 노조 추천 TBC 시청자위원인 필자가 시청자위원회에서 취재를 제안했고,

TBC는 올 6월 현충일에 맞춰 지금까지 10여 차례의 보도와 혜문스님을 초청한 시사토론회까지 편성했다. 필자도 참여한 시사토론회에서 도출한 공감대는 현충시설의 일본나무와 외래나무는 모두 우리나라로 교체하되, 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경우 일본나무가 대표나무로 비쳐질 정도로 과잉 식재된 것은 부분적으로 교체해 재조경하자는 것이다. 특히, ‘(일본)향나무 교목’은 즉시 바뀌야한다는 공감대가 컸다.

TBC의 집중보도를 통해 국내 유일의 애국지사 묘지공원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이 가이즈카 향나무를 대표나무로 조경을 한 부끄러운 사실이 처음으로 공론화됐고, 일본향나무를 학교 교목으로 정한 비율이 대구는 22%, 경북은 23%로 전체 수종 가운데 가장 높다는 부끄러운 사실도 처음으로 공론화됐다. ‘독립운동 성지’ 안동의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에 유독 일본나무가 많이 식재된 정말 죄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사실도 처음으로 조명됐다. 우리사회의 ‘집단적 무지’의 민낯을 드러낸 깊이 있고 참신한 보도였다.

나아가 거부감 없는 참신한 소재로, 새롭게 접근한 대중성 있는 일제잔재 청산 보도라는 점에서 시민단체의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에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철한 역사의식을 갖춘 한 언론인의 숨씨가 빛어낸 작품이다.

TBC의 집중보도의 여파는 지난 7월 대구경실

련의 ‘신암선열공원 등 현충시설 주변 일본향나무 교체 및 대구광역시 조경관리조례 개정 등에 관한 청원’으로 이어졌고, 청원에 따라 대구시가 관련 대학교수에게 현충시설에 대한 일본나무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직접적인 시책반영으로 발전하고 있다. 권은희 국회의원도 대구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국감에서 가이즈카 향나무가 학교 조경에 과잉 식재된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 경북협의회도 11월 3일 경북도의회에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다. 빠르면 12월 하순에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에선 ‘국립현충원 일본 수종 제거에 대한 청원’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고(2014.5.2.), 예산도 30억 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구미경실련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앞마당을 일본향나무 전 시장처럼 조경을 한 구미세무서의 경우 국가기관이 갖춰야 할 정체성을 망각한 무국적 조경”이라는 지적을 받은 구미세무서가 11월 3일~5일, 가이즈카 향나무를 모두 제거했다.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 시민운동’ 전개 이후 국가기관이 동참한 첫 사례이다.

구미경실련은 그 동안의 가치운동에서 시책변화를 이끌어내는 대안운동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11월 10일, ‘경북형 조경’을 개발할 것을 경북도에 제안했다. 일본나무 문제를 ‘무지’와 ‘무국적 조경’이 빚은 것으로 자체 규정한데 따른 대안이다. 담양 소재원과 보길도 윤선도원림 같은 훌륭한 한국형 조경을 목표로, 몇 가지 유형별 표준 조경을 설계·보급하고 지원조례를 만들자는 것



▲ 구미세무서-가이즈카 향나무를 제거하기 전 모습(2013.9.3) 사진=구미경실련



▲ 구미세무서-가이즈카 향나무를 제거한 모습(2014.11.12) 사진=구미경실련

이다. 표준 조경에 기존 시·군별 시목(市木)·군목(郡木)이나 지역특성에 알맞은 나무를 결합하면, 획일화를 예방하면서 정체성 있고 다양성 있는 조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도 금각사 정원에 감탄하듯이, 일본처럼 훌륭한 조경을 많이 만들어 관광자원을 확대하자는 쪽으로 시책변화를 이끌어내자는 게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 시민운동’의 또 하나의 목표이다.

전국의 지역경실련에서 이 운동을 함께 벌인다면, 녹색시대에 걸맞은 나무와 조경이라는 참신한 소재에다 깊은 의미까지 부여돼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경**

지역이야기

2014년 11월 12일



지방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언제까지 되풀이 해야만 하는 것인가?

정병인
천안아산경찰서 사무국장

올해 7월 출범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겨우 출범 100일을 전후해 경쟁적으로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연일 관련 기사가 언론매체를 장식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외유성 관광’, ‘혈세 낭비’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의원들은 6월까지 선거를 치루느라 해외연수에는 관심이 없었던 반면 연말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심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가한 10월에 집중적으로 해외연수를 떠나게 된 것이다.

물론 지방의회가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국의 지방의회 운영 방식을 습득하고, 해외 선진 도시의 발전을 벤치마킹해 우리 지역의 발전과 정책방안을 제시하겠다는데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는 그동안 수 없이 되풀이되어 지적돼 왔던 문제이다. 이런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연수 목적에 대한 명확한 과제와 내실 있는 준비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연히 연수의 목적이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일정의 대부분이 여행사의 상품과 유사한 단순 견학과 관광방문으로 채워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해외연수는 당연히 ‘외유성 관광’,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더군다나 행정부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오히려 의회규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월권행

위를 통해 독단적인 결정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강행했다면 대의 민주주의 기관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천안시의회의 의원 해외연수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천안시의회 규칙에는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적합성,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고, 출국 15일 전까지는 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천안시의회는 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심지어 출국 15일 전까지 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이는 규칙에 규정된 ‘...5인이하의 의원이 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모호한 조항을 악용한 것이다. 이런 조항은 전국의 지방의회 규칙중 천안을 비롯한 충남의 몇 개 시군에만 있는 특이한 조항이다. 천안시의회는 위 조항을 근거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심사위원회에 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심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으로 내용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조차 없이 의원들의 국외출장을 강행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심사위원회가 반드시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심사한다, 심사하지 않

는다’는 결정은 심사의 대상자인 천안시의회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것이다.

타 지역의 경우에는 ‘예산편성한도액 범위에서 10명 미만의 의원이 외국 정부의 공식행사 초청,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공무국외 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심사 예외 규정으로 외국 공식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으로 그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도한 인원의 출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적정인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타 지역의 규칙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 천안시의회의 해외연수는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경우다.

뿐만 아니라 천안시의원 21명중 15명은 3개의 상임위원회별로 각 5명씩 구성해 터키, 일본, 중국을 하루 간격으로 3일간 동시에 출국했다. 그럼에도 개별 팀이 5인으로 구성됐다는 이유로 심사하지 않는다고 의회 스스로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행정부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분리발주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천안시의회 스스로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해 보다 엄격히 지켜야하는 절차와 규칙을 스스로 파괴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천안시의회가 규칙과 절차를 파괴하면 서까지 무리하게 강행한데는 이유가 있다. 이는 연수 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논의나 준비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수의 목적과 내용이 있을 수 없고, 당연히 손쉬운 여행사가 추천해주는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게 된다. 연수 목적을 위한 국가 기관이나 단체와의 좌담회등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관공서 방문조차 없이 여행가이드만 쫓아다니며 관광만 하고 오는 것이다.

이렇듯 천안시의회처럼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가 언제까지 되풀이 돼야만 할 것인가! 문제의 핵심은 해외연수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연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만 보완하면 좋을 것이다.

우선은 연수의 목적과 과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담당공무원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기반이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연수의 필요성이고, 연수의 목적과 구체적인 연수 과제가 설정되면 방문해야만 하는 대상과 논의 방법이 결정되게 된다. 더 나아가 연수시 함께 지역의 현안을 논의했던 담당공무원이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동행한다면 더욱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는 해외 연수를 개별 지방의회 의원에게만 맡겨 놓는 것은 연수 기획과 진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중앙정부기관이나 국회연수원, 전국지방의회협의회 같은 조직을 통해 전문적인 연수 기획을 제공하거나 동일한 연수 목적을 위한 의원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함께 연수를 다녀오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는 연수를 다녀온 후 연수보고회나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연수의 결과물을 공개적으로 설명 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지역 사회와 함께 만들어 내는 작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의회에 대한 감시와 정책 제안 운동이 절실하다. **정**

세월호 참사 그 이후

김경민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램을 담은 촛불이 매일매일 늘어만 갔다.

결국 아무도 구조되지 못한 상황에서 희생 학생들이 늘어가고 시신이 발견되면 확인하고, 확인절차 끝나면 안산에 와서 장례치르는 것이 한달여가 지속됐다. 자식을 보내고 넋을 놓고 있던 가족들이 조금씩 기운차려 이렇게 아이들의 희생을 억울하게 만들 수 없다며 가족대

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활동을 하게 됐다. 세월호 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는 안산지역의 47개 단체로 구성된 조직이다. 참사 첫날 촛불기도회에 모인 시민모임으로 출발해 사고대응에 너무나 무능했던 정부와 관계자의 책임과 사고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가족대책위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시민사회 연대조직으로 발전했다.

사고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는 목표아래 매일매일 진행하는 촛불문화제, 동네마다 진행되는 촛불모임, 서명운동, 집집마다 현수막과 리본걸기, 시민분향소 운영, 시민농성장 운영, 전국순회버스서명운동, 지방선거정책전달, 국회의원질의, 가족대책위원회 지원활동 등을 해왔다. 결국 여야가 합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개월이 지났다. 결국 가족결의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의 수색은 중단됐고 선박인양조차 어찌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관계기관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을 잃었고 시신조차 못찾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안산은 아직도 4월 16일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4월 16일 사고 당일부턴 안산에서는 촛불기도회가 시작됐다. 세월호 탑승객의 대부분은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들이었고 안산의 촛불기도회는 단원고로부터 시작돼 안산 곳곳에서 이뤄졌다. 처음엔 세월호 안에 갇힌 사람들을 빨리 구조하라는 기도로 시작했으나 하루 하루 지나면서 이미 희생된 분들에 대한 추모, 아직 나오지 못한 이들의 구조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바


의한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은 미흡하므로 특별조사위원회와 진상규명의 과정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또한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진실규명이 이뤄지고 안전사회 건설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과제로 우리에게 남았다.

세월호 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 외에도 4월 16일부터 안산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들이 이뤄져왔다. 참사직후부터 팽목항으로 자원봉사를 떠났던 많은 안산시민들과 단체들이 있다. 팽목항과 안산의 정부합동분향소는 구호물품전달, 배식, 가족돌봄활동들이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안산지역 치유와 회복을 위한 활동들도 계속 되고 있다. 가족과 시민들이 계속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안산시 공무원들과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꾸준히 가족들과 동행하고 방문하며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하고, 가족과 안산시민들의 상담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온마음센터나 이웃등의 공간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가족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전달하는 활동, 물품이나 반찬제공 등 일상생활을 순조롭게 영위하도록 하는 노력도 있다.

한편 기록관련 전문가들과 안산시민들이 함께 구성한 세월호참사 시민기록위원회는 이번 세월호 참사의 기록과 기억의 주체가 피해자와 시민이 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피해자와 시민의 관점에서 세월호와 관련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 사진과 영상, 르포, 구술, 만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피해당사자와 이후 시민들의 기억과 활동을 기록하며, 기억저장소를 통해 시민과 가족

을 만나고 있고, 모든 기록물이 결국 4월 16일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한 과정을 겪어오면서 마음은 피폐해지고 한쪽에서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시민들이 늘어가기도 사실이다. 근거가 명확하진 않지만 지역경제와 안산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며 세월호의 지겨움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제 안산은 지치고 깨져가는 지역을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가족들이 안산을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안산시민들이 받았던 충격과 아픔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안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안산시, 안산시의회, 각종기관 및 단체,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이후 겪어왔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추모, 진상규명, 유가족지원, 참사재발방지, 도시공동체회복, 안전사회 등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 시민들에게 깊이있는 여론조사를 하고 공론장을 만들어 시민들이 맘껏 서로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4월 16일은 안산의 역사에서 잊혀질 수 없는 날이 됐다. 매일 16일 안산시민들의 모임 [동행 0416]은 세월호사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공동행동을 할 것이며 희생자 가족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는 정기적으로 발간돼 안산지역에 널리 배포될 것이다. 정부합동분향소를 중심으로 희생자들을 기리는 프로그램이 지속될 것이며 희생자가족들과의 결연사업도 확대될 것이다. 

지역이야기

2014년 11월 12일

외로움을 인정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영화 her

이학린 경제정책팀 간사
posszet@ccej.or.kr



묘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시놉시스만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공상과학 로맨스지만, 관람 내내 드는 생각은 그 어느 영화보다 우리 삶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 받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건 마치 식물이 뿌리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관계라는 뿌리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성숙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영화 her은 누군가와 혹은 무언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위해 좀 더 자극적인 소재와 미래의 시간으로 장소를 옮겨와 그 지점을 포착해 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둘의 만남

영화는 주인공이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된 한 여성과 대화를 주고받는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주인공인 시어도어는 어렸을 때부터 소꿉친구로서 수많은 시간을 함께해왔던 부인과의 이혼을 결정하는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순순히 이별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어도어는 그녀 앞에서 웃음만을 보일 뿐입니다. 실연의 아픔이 그를 기다리더라도 그녀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타인의 연애와 안부 편지를 대필해주는 일을 하는 주인공 시어도어는 감수성이 매우 풍부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 속 여성과의 관계

에 있어서는 중요한 순간에서조차 아무 결정하지 못하고 현실 도피적인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그런 시어도어에게 소프트웨어인 사만다는 그의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세상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도 하며, 짓궂은 이야기까지 함께 하며 연인보다는 일종의 소셜메이트 같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시어도어는 OS인 사만다와 함께 같은 높이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며 지난 연인과의 헤어짐에 우울해했던 시간들을 잊게 됩니다. 카메라는 그녀의 눈이 되고 이어폰과 마이크는 그녀의 귀와 입이 되어 함께 여행도 떠나며 주인공의 친구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시어도어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내면을 모두 드러내어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OS인 사만다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OS에게 느끼는 시어도어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도어와 사만다는 육체라는 존재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시어도어는 짧은 시간에 오래된 연인처럼 느껴졌던 사만다 스스로가 새로운 OS지성들과 만나면서 다시금 사랑으로부터 소외받게 됩니다. 사랑의 종국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함만이 남습니다. 심지어 사랑의 소유가 가능하다 믿었던 생각마저도.

다시 혼자가 된 주인공은 같은 OS를 경험했던 동료와 함께 마천루위에 올라 사랑과 존재의 덧없음을 느끼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허탈감, 그건 갈망의 반대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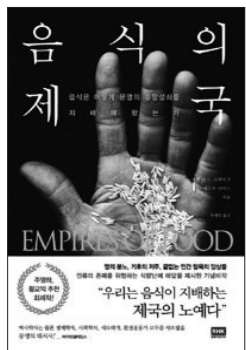
영화 끝에 던져진 단 하나의 질문은 우리의 가

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나 연인을 갈망하고, 또 다시금 아픈 이별을 맞이하여야 하는지요. 하지만 어쩌면 인간이기에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또 이를 위해 일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낭만적인 사랑을 원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의 조건들을 꼼꼼히 평가하게 되지요. 그리고 수 많은 만남들 중에 이별은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것에서 시작돼 그것이 헤어짐에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의 본질 혹은 인간의 본질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혹은 그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욕심이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 설령 그것을 갖게 되어도 어느 순간 갈망했던 기억조차 잃어버리는 것을. 그리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언제까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것에서 현실적인 것을 찾아내는 이 영화는 그래서 묘합니다.

주어진 미래와 잃어가는 과거의 틈 속에서 우리네 삶은 사랑과 이별의 쳇바퀴 안에서 그리고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아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부질없는 희망과 함께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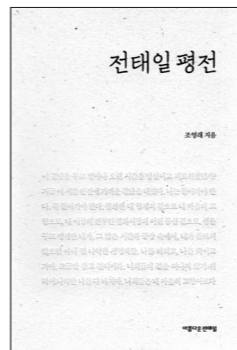
사랑과 이별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갈망에서 한발 치 벗어나 우리는 조금 덜 아파하고,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영화 her을 통해 바라봅니다. 



“과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
 <음식의 제국(Empires of Food)> 에번 D. G. 프레이저 · 앤드루 리마스, RHK
 김동규 경제정책팀 인턴

‘밀(미국산), 돼지고기(국산, 칠레산), 토마토페이스트(중국산).’ 출근하기 전, 몇일 전에 마트에서 산 냉동볶음밥을 데워서 먹기 전에 무심코 봤던 상품 뒷면의 식품 원산지 표기내용이다. 이 표기를 보며 내가 흥미를 느꼈던 것은 내가 먹은 이 4,000원짜리 볶음밥이 4개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의 무역, 노동, 시장 그리고 경제가 함축되어 생산된 식품세계화(Food

Globalization)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마트에 가서 웬만한 가공식품을 보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수입된 원재료가 쓰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진다. 즉 우리의 식탁은 이미 범세계적으로 조직된 식품의 제국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일부가 됐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자연에게 의존해왔고 식량생산은 국가, 민족, 그리고 문명의 흥망성쇠와 함께해왔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는 식량의 대량생산, 장기보존, 그리고 광범위 유통을 이루어 냈고 적어도 대한민국에선 식량부족문제는 표면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음식은 일종의 ‘패션’으로 변질되어 계절과 유행을 따라가는 사회적 행위가 되었다. 주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이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을 찍고 그 메뉴와 가격을 SNS에 올리는 트렌드는 식품이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음식의 제국’은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먹는 식품이 겪었던 포식과 멸망, 환경 위기를 전 지구적 관점에서 살피며 식품의 제국의 명암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 책은 현대인들이 식품생산에 대한 4가지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는 지구가 비옥하다는 가정, 둘째는 앞으로도 날씨가 계속 좋을 거라고 믿는다는 것, 셋째는 한두 가지 작물만을 대량 생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석연료가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하지만 마음속에 경기침체, 금리변동, 학점, 월급 등 걱정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현대인들에겐 식품체계가 불안하다는 공포는 쉽게 무시된다. 또한 휴대폰 약세사리에는 몇천, 몇만원을 주고서 구입하는 반면에 식료품비로 몇백원을 더 쓰는 것을 망설여하는 현실은 우리가 식품제국의 문제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구상에 모든 인간은 식품의 제국의 시민이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제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음식을 먹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 제국의 어두운 면을 간과하거나 무시해왔고 결국엔 우리 혹은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무엇을 어찌 먹고 살아야 하는지.. **경**



44년이 지난 지금, 우린 ‘노동자도 사람’인 세상을 살고 있을까?
 <전태일 평전> 조영래, 전태일재단
 심재석 회원홍보팀 수습간사 stratus0217@ccej.or.kr

얼마 전 경실련 25주년을 기념하는 기획토론회 두 번째 순서가 서울시청 근처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토론회 참석을 위해 가던 중 시청역 안부터 노조 조합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다. 프레스센터 근처 약 20m 높이의 전광판 위,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엠(C&M)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해고된 109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간 것이었다. 노동자들의 목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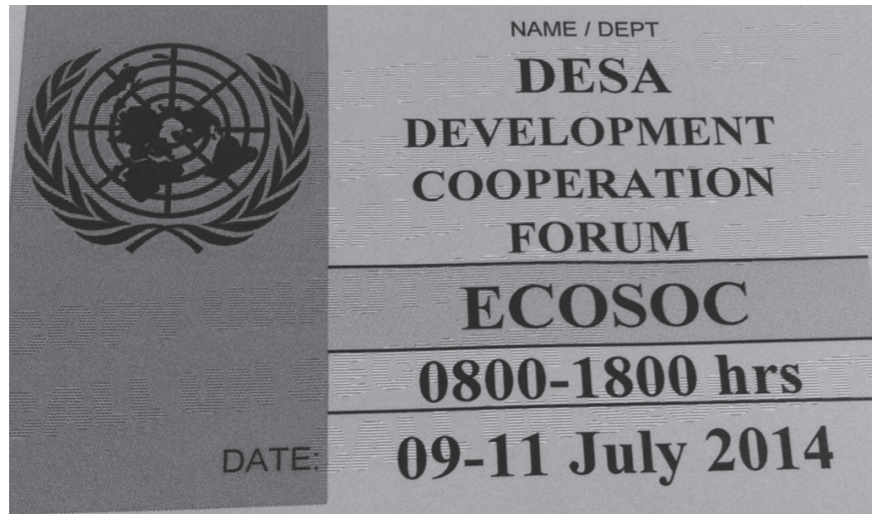
건 싸움이 어디 이 뿐인가. 지난 13일 대법원에서는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했다며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6년간 싸워온 해고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비정규직 차별 처우, 고용불안, 노동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떠올려야 하고 기억해야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그는 바로 44년 전인 1970년, “노동자도 사람이다!”며 분신했던 전태일 열사다. 그는 분신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고 외쳤다. 어떻게 하루에 16시간 씩 일을 시키고, 십대 초반 여공들에게 버스 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을 주며 일을 시켰을까. 게다가 그런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퇴직금이나 산재보험은 커녕 폐기처분 하듯 내쫓아 버리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하니 1970년대 당시 노동환경이 얼마나 최악 중에 최악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다행히도 4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당시보다는 나아진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가 원했던 주 1회 휴일을 많은 수의 노동자가 가지고 있고, 임금 역시 이전에 비해 매우 높아진 편이다. 부당해고에 맞서는 노동자들을 그린 영화가 개봉하는 등 사회적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임금노동자 45%가 제대로 된 퇴근시간 조차 못 지키고 있다. OECD 최하위 수준을 보이는 최저시급으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있다. 한 여당의원은 법정 노동시간을 더 늘리고 휴일근무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을 빼자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는 한편 노동자들은 지금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노동법 준수를 외치며 목숨을 건 긴 싸움을 해나가고 있다. 과연 언제쯤이면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근로기준법이 준수’되고 ‘휴일에 쉴 수 있는’ ‘노동자들이 혹사당하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질까. OECD에 들어갔다고 자랑하던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언제쯤이면 OECD 하위권을 벗어날 수 있을까? 전태일 열사 44주기를 맞아 그의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경**

월간경제

2014년 11월 12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국제사회의 이중주: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분절화와 통합화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이제 1년 뒤인 2015년 9월 UN총회를 기점으로 그 장렬했던 위용을 역사의 뒤안길로 묻고 이제 국제사회는 Post-2015개발의제를 달성을 위한 새로운 15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16-2030년을 책임질 또 하나의 슬로건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사회개발·포용적 경제개발·지속가능개발·평화와 안보 등 네 가지 분야로 확대 개편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컨센서스가 모여지고 있는 형국이다. Open Working Group (OWG)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별로 SDGs가 현재 17개 목표로 가안이 잡혀 있는데, 2014년 12월까지 반기문 사무총장의 최종보고서가 UN에 제출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2015년 1월부터는 정부간 협의가 시작되어 2015년 9월에 있을 UN총회에서 정확한 목표들이 결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국제원조사회의 15년을 인도해 나갈 중요한 목표인만큼 의제를 형성해 나가는 거버넌스의 중심축에는 UN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유엔개발협력포럼 (United Nations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UNDCF)이라는 UN 산하의 개발협력과 관련된 기관들의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개발의제와 연관되는 포럼과 비정부기관과 같은 개발 행위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Post-2015 개발의제 논의를 수렴하고 통합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UN은 본질적으로 거버넌스 자체가 회원국 수 및 비정부행위자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거대한 내부 정책결정과정 등으로 비대하고 복잡다단하다. 주지하다시피 UN 내부 결정과정은 관료제, 다양한 의견수렴과정, 책무성 (accountability) 확보 등의 이유로 의제설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Post-2015개발의제 과정은 2012년부터 치밀하게 기획되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UNDCF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과정, 고위급패널 (HLP)보고서 등으로 다층적인 구조로 전세계 모든 시민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다각도의 노력이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UN 중심의 새로운 SDGs체제를 구축하려는 통합세력 주변에는 UN체제와 분절돼 운영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소 단위 협의체들을 쉽게 목도할 수 있으며, 이 협의체들은 UN보다 확연히 빠른 움직임으로 속도전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이런 현상을 심각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도전인 분절화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호 주체간에 보완재 역할로 일정 정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문제의 핵심은 UN체제와 별도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개발관련 다자 협의체를 비록 느슨한 형태일지라도 UN프로세스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런 분절화에서 통합화로의 전환은 UN의 정치적 리더십, 정통성 그리고 조직의 효율성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후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과정이다.

UN, 다자협의체와 전략적 연대 필요

무엇보다도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포럼(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에서 합의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과



UNDCF 간의 관계설정 및 구조적 조정이 필요하다. GPEDC가 UN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이행기제 (implementation mechanisms)들의 제도화에 있다. UN을 필두로 앞으로 국제원조사회가 SDGs를 결정하고 추진할 때 반드시 동원되어야 할 제도가 이행기제인데, 책무성기제·개발재원·글로벌파트너십 등과 같은 구체적인 논의가 이미 GPEDC에서 합의되고 있는 상황이라 상호 간의 협력은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 SDGs로 잠정적으로 제안된 17개 목표

중 16번과 17번이 GPEDC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 두 제도의 정합성을 높여서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GPEDC는 SDGs체제의 이행기제 부분을 전담하는 윤희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한국정부가 부산총회 이후 멕시코정부와 UNDP 등과 협력해 GPEDC를 정착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반면, 독일의 DIE 연구소에서는 GPEDC와 UNDCF 간의 겹치는 의제가 많아 Post-2015시대에 상호 정치적 패권을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Open Government Partnership

action plan를 주창하고 스스로 집행해나간다는 점에서 향후 UN과 적절하게 접목이 되면 UN의 홍위병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OGP의 주축세력인 영국과 미국에 의해 독자적인 행보가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UN체제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UN체제 안으로 명확한 지위와 역할이 부여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두 주체 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GPEDC와 더불어 한국정부가 관련된 다자협의체는 2011년 8월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시작한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으로 2014년 현재 66개국이 참여하는 규모로 성장했으며, OGP의 주목할만한 특징은 정부와 시민사회단체(CSOs)가 동등한 자격으로 개발파트너십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한국도 2011년 9월에 가입했고, 현재 정부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정부3.0과 연동되어 '독립보고매커니즘(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IRM)'에 의거해서 한 차례 한국정부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보고한 바 있다. OGP는 일종의 UN체제 장외에서 특정국가군과 CSOs가 Post-2015개발체제에 대한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있어 앞으로 15년간의 문제는 UN을 중심으로 구축된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 UN 주변에 형성된 다양한 다자협의체들을 통합하거나 전략적인 연대시스템을 제도화해 어느 정도까지 분절화 가능성을 예방하는가에 있다. 앞서 GPEDC·OGP와 UN 간의 시나리오처럼 상호간의 적절한 형태의 분업(division of labour)이 제도적으로 활성화된다면, BRICS와 같은 신흥원조국협의체가 내뿜는 불협화음이 아닌 생산적인 거버넌스의 이중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 **경**



통일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



박경화
작가

로저 셰퍼드, 전직 뉴질랜드 경찰관인 40대 후반의 이 사나이는 내가 가장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다. 아마 2012년 어느 날이었을 게다. 경북공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다가 우연히 로저 셰퍼드의 사진전을 보게 되었다. 남쪽 백두대간뿐 아니라 북쪽 백두대간까지 종주를 하고, 그 사진을 모아 산림청 주최로 사진전을 열고 있었다.

강원도의 산보다 더 높고 장쾌하게 펼쳐진 개마고원 풍경과 나무 한 그루조차 없는 민둥산, 다양한 표정을 가진 금강산까지...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 같은 북녘의 웅장한 산줄기들이 큰 액자 속에 담겨 있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우리 땅을 남반구 출신 사나이가 먼저 걸었다는 것이 몹시 부럽고도 배가 아팠다. 우리는 기껏해야 반쪽 백두대간만 볼 수 있는데, 남북 백두대간을 온전히 걸은 이가 우리 민족도 아닌 뉴질랜드 사람이 될 줄이야.

몇 달 후 로저 셰퍼드가 걸었던 북쪽 백두대간 종주는 텔레비전 다크로도 방영됐다. 탐방로가 제대로 나 있지 않은 진흙탕길을 달리다가 낡은 차가 고장이 나고, 코펠과 버너가 아닌 램비에 모닥불을 피워서 밥을 해 먹고, 빨치산 대원 같은 후줄근한 가이드 사내와 함께 종주하는 모습은 못내 안쓰러울 정도였지만 언젠가 나도 저 길을 걷고 말리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욕망이 불타올랐다.

제3땅굴~도라전망대~도라산역~임진각으로 이어진 통일 기행

도라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본 개성공단은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개성공단 뒤로는 아파트 여러 채가 우뚝 솟아 있는 개성시가 보였다. 그 마을에 살

면 세금도 내지 않고 군대면제라는 말에 남자들이 매우 부러워하는 대성동도 보이고 판문점도 어렵잖게 보였다. 정말 이렇게 가까울 줄이야. 10월 18일 경실련통일협회가 마련한 현장기행을 따라갔다.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임진각을 간다는 말에 두 번 고민할 틈도 없이 냉큼 같이 가겠다고 했다. 신라의 마지막왕인 경순왕릉과 연천군에 있는 북한군·중국군의 무덤에는 따뜻한 가을볕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러잖아도 서울역에서 도라산역까지 DMZ 통일 열차를 운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였다. 좋은 분들과 같이 가고 친절한 해설까지 해주는 DMZ 기행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비무장지대는 참 묘한 기분이 들게 만드는 곳이다. 반공교육을 투철하게 받았던 청소년 시절엔 곧 총알이 날아올 것 같이 후들후들 떨리는 곳이라 생각했고, 통일운동이 한창이던 대학 시절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호기심 가득한 곳이었고, 지금은 아주 독특한 관광지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이런 생각은 비단 나 뿐만은 아닌 모양이다.

첫 도착지인 임진각부터 왠지 낯선 중국어 때문에 귀가 따가웠다. 작년에 우리나라를 찾아온 중국인 관광객은 430만 명인데 거의 대부분이 무장지대를 찾아온다고 했다. 가는 곳마다 와글와글 주변 사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한국여행의 필수 코스로 찾아오는 이들은 한반도의 분단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할까?

사람이 사라지자 살아난 자연생태계.. 비무장지대

내가 활동했던 녹색연합에서는 해마다 봄이 되면 활동가들이 열흘 동안 환경현장을 걸으며 우리 땅의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녹색순례를 떠난다. 2001년 그해 녹색순례는 비무장지대였다. 열흘 동안 임진각에서부터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구간을 나누어 걷고 또 걸었다. 가장 많이 본 것은 중무장한 군인과 철조



▲ 임진각에 위치한 열차는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가던 중 폭격으로 멈추었다. 수 많은 총탄 자국과 녹슨 모습은 한국전쟁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망, 초소, 군부대였고, 오르락내리락 끝없이 이어지는 철조망과 산불로 까맣게 타버린 철조망 들판, 흡사 아프리카 평원 같은 철원 비무장지대, 과일화채 그릇 모양을 닮은 양구 편치볼에서 걸어 내려오는 길은 오래도록 깊은 인상으로 남았다. 남북이 분단되면서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남북 각각 1km 씩 철조망을 세우면서 인간의 출입이 금지되자 그 안의 자연생태계는 살아났다. 그 생태계를 직접 보고 현장에서 듣는 생생한 이야기는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그 뒤로도 간간히 비무장지대를 찾았지만 땅굴은 가본 적이 없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던 곳 역시 땅굴이다. 땅굴은 매우 깊은 곳까지 길게 이어졌다. 안내판에는 350미터라고 적혀 있는데 '이러다가 북한까지 걸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험악 걸어야 했다. 좁고 답답한 굴속을 와글와글 쉬지 않고 떠드는 중국 사람들과 같이 걷자니 통일에 대한 엄숙함은 끼어들 겨를도 없었다.

제3땅굴과 강제징용된 할아버지가 일한 탄광.. 모두 암울한 역사의 민낯



▲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바로 지하로 이어진다. 제3땅굴은 총 길이 1,635m로 지하 73m에 위치했으며 74년 발견됐다.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바로 지하로 이어진다. 제3땅굴은 총 길이 1,635m로 지하 73m에 위치했으며 74년 발견됐다.

제3땅굴은 1974년 북한에서 귀순한 김부성 씨가 자신이 땅굴을 측량한 측량기

사였다고 제보를 하면서 알려졌다. 땅굴 예상 위치에 PVC 파이프 시추공을 107개를 설치해 두었는데, 3년이 지난 1978년 6월 10일 한 시추공에서 폭발음과 함께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시추공을 추가로 설치하다

가 땅굴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총 길이 1,635m, 지하 73m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이 2m, 폭 2m의 둥근 아치형 땅굴이다. 땅굴 안쪽 울퉁불퉁한 바위를 손으로 짚으니 촉촉한 물기가 닿았다.

몇 해 전, 일본 교토 외곽에 있는 단바망간기념관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이곳은 한국인 강제징용자들이 망간을 캐던 탄광이다. 망간은 철을 단단하게 만드는 광물로 총이나 대포를 만들 때 꼭 필요했다. 평생을 이 탄광에서 일하다가 진폐증을 앓은 이정호 선생이 기념관을 짓고 아들이 운영하는 곳인데 만성 적자에 허덕인다고 했다. 일본어도 할 줄 모르고 버스 타는 방법도 몰랐지만 물어 물어 그곳을 찾아갔다.

굳이 먼 길을 찾아간 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1943년 무렵 강제징용되어 탄광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결국 할아버지는 고향마을로 돌아오지 못했고, 지금도 생사를 알 수 없다. 비록 이 탄광에서 일한 것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가 일했던 비슷한 환경을 찾아가보고 싶었다. 밖에는 한여름 더위가 작렬했지만 탄광은 서늘했다. 탄광의 벽과 바닥에서도 촉촉한 물기가 스며 나왔다. 이 좁고 답답한 탄광에서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일했을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했다.

바위 사이로 스며 나오는 물은 한 맺힌 할아버지의 눈물 같았다. 땅굴과 탄광 모두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인 현장이다. 이 어두컴컴한 공간은 우리 민족이 겪은 암울한 역사이자 적나라한 민낯이다.

통일이 되면 환경운동을 하는 우리는 할 일이 참 많다. 로저 세퍼드처럼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백두대간을 걸으며 보전가치가 있는 숲과 훼손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남북 생태계와 생물종 조사, 민둥산이 된 북녘 땅에 나무심기 행사, 환경교육 프로그램까지 흥미로운 일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현장기행에 작은 쌍안경을 가지고 가서 톱툰이 하늘을 나르는 새를 관찰했다. 겨울철새인 기러기와 오리류들이 남쪽을 향해 V자를 그리며 날아오곤 했다. 저 자유로움이 부럽다. 2007년 금강산을 갔을 때, 앞으로 해마다 방문할 거라 생각해서 설령설령 보고 왔는데 그 다음해부터 중단되어 지금까지도 가지 못하고 있다. 내년엔 아무래도 백두산 야생화 기행부터 다녀와야겠다. **경**



딱딱할 줄 알았던 월간 경실련의 반전

사람과 사람사이의 접촉과 소통이 늘어나고 정보교환이 늘어날수록 한 쪽의 입장을 고수하기란 힘들어집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한쪽의 입장을 고수하는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이런 태도가 신뢰감을 심어주는 이유는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신의 입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월간 경실련은 신뢰가 가는 잡지입니다. 시간도, 이슈도 각각 다르지만 월간 경실련에 올라온 글을 보면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한 가지가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바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이 '실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한 주장이라서 더욱 더 신뢰가 갑니다.

월간 경실련을 읽으면서 '이 잡지가 단순히 경실련의 활동을 홍보하는 소식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제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서 딱딱한 잡지일 줄만 알았는데 다양한 사회 문제 뿐만 아니라 칼럼, 특집기사, 회원기고, 지역의 소식, 다양한 문화 활동 등도 소개하는 잡지라는 것을 보고 사실 조금 놀라고, 흥미로웠습니다.

첫 번째로 흥미로운 콘텐츠는 '지역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는 광명에 살고 있지만, '지역이야기'의 '자리다툼으로 얼룩진 광명시의회 오명의 역사'에서 다뤄진 내용들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광명시 안에서 크게 이슈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직접 투표를 해서 뽑은 시의원들인데도 정작 그들의 활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이야기'에 실린 글들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는 '동승동 책방골목'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글들을 읽으면서 월간 경실련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책을 하나 보려고 해도 어떤 책이 좋은지 찾아보고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월간 경실련의 '동승동 책방골목'에 올라온 글은 이 잡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간 경실련은 가장 중요한 정보의 정확성은 물론이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다루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잡지에 빠져들게 합니다. 계속해서 무거운 내용을 다루게 되면 지루해 질 수도 있는데 회원 기고, 문화 콘텐츠 등의 이야기들을 중간에 배치해서 지루할 틈 없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잡지를 접할 수 있게 해주신 편집자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잡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

벌때추니...

성실한 일개미를 한쪽에 밀어두고,
캐리어 끌며 머플러 휘날리며 공방을 강하늘
배짱이를 자랑하는 대중문화.



직장인에게 떠나라 종용하지 말고,
떠나리 '못'하고 묵묵히 참고 일하는 사람들과
일상을 즐겼는지 물어봐. 참고 살아가는
소시민을 응원해주세요.

"2014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주권국가로서 자주성에 큰 상처' 성명을 읽고...

(10.24) @genekim1 <트위터>

생각 없이 공약으로 내건 분은 더 큰 문제죠!

▶ 그렇습니다. 전작권 환수가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 이번에는 기한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국가 간 합의사항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2015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지난 대선 당시 국민과 약속한 박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의 여론수렴 없이 밀실에서 전작권을 재연기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기도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 한 마디조차 없네요.

홍명근 경실련 통일협회 간사 (@lolen86 ▶)

■ '대통령과 검찰은 기본권 침해하는 사이버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을 읽고

(10.02) @iloveRHCPyu <트위터>

진짜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남의 대화를 엿들겠다니... 이게 대체 무슨 발상입니까?

▶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을 해내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는 검찰의 행태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시로 감시하겠다는 것인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유애지 정치입법팀 간사 (@yustina0264 ▶)

■ '검찰 군PX 입찰비리 기소, 군피야 해결 계기 되어야' 성명을 읽고

(10.09) /ohmyceo <페이스북>

단팥빵부터 잠수함, 전투기까지... 군대의 비리는 참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알록달록 다채롭습니다.

▶ 경실련은 지난 2월 허위영수증 발행, 가격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PX 납품 단가를 속여 시중가보다 비싸게 물건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방관한 군 담당관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로 인한 군인들의 피해만 500억~800억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7일 이들이 무더기로 기소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단팥빵부터 통영함에 이르기까지 군 전반에 걸쳐 이러한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실련은 군납비리를 비롯한 이른바 군피야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홍명근 경실련 통일협회 간사 (/lolen86 f)

■ '황교안·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친재벌적 망언' 성명을 읽고

(09.26) @kyungso20033 <트위터>

무조건적인 사면은 반대함. 기업인, 재벌들이니깐. 벌금으로 한 1조씩 납부한다면은 몰라도. 그럼 부족한 세수도 메꾸고...

▶ 과거 재벌총수들의 구속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은 기업경쟁차질, 경제살리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재벌들의 사면을 염두에 둔 친재벌적 이고, 경제범죄를 오히려 부추기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자리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부패를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두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고발을 했습니다.

권오인 경제정의연구소 부장 (@micmac_z ▶)

■ '연이은 인사 참사, 김기춘 비서실장 즉각 해임해야' 성명을 읽고

(09.26) @wonhyoyoon <트위터>

네비두유 끝까지 가보자 그 참담한 꼴 구한말 본보기 반복

▶ 수많은 인사 참사를 겪고도 송광용 전 수석의 경우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등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인사위원장을 여전히 김기춘 비서실장이 맡고 있다는 데 있다는 것에 있죠. 청와대는 대체 언제까지 이런 인사 참사를 계속 할 생각일까요?

유애지 정치입법팀 간사 (/aejiyu f)

신입회원 한마디 "반갑습니다! 회원님"

김경훈 | 이번 동서식품 아몬드 후레이크 먹은 사람입니다.

김봉미 |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실천하기 위하여

김철호 | 경실련은 한국 사회에서 꼭필요한 존재다.

송민수 | 경실련 활동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경실련 파이팅!!

신원철 | 상시 경제정의실천연합회의 활동을 지켜보던중 늘 약자편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과 최근에 내가 겪고 있는 일련의 모습들이 침묵보다는 참여의 방법으로 서민들과 소외계층이 더욱 미소 짓는 정의로운 사회, 서민들의 아픔과 소외감이 덜 하는 사회였으면 합니다.

유진호 | 말로만 불평하느니 대표에게 힘을~

이애화 | 나의 작은 후원이 실천으로 연결되길 바랍니다.

장용덕 |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만중 | 사회의 부조화와 불평등으로 억울하게 된 사람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주정순 | 통일을 위한길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게 하는길은 대북전단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부딪쳐도 대북전단은 끈을수 없는 생명이고 고향의 부모형제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의 비유나 맞추려고 대북전단을 중지하라고 하지만 제대로 중지해서는 안돼고 멈춰서도 안됩니다. 끝까지 싸워 주십시오.

표구열 | 한국 경제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실련 활동을 통한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경제 주체들간에 신뢰가 회복되길 원함. 그래서 나와 내 주위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함.

함두호 | 경기도 광주시 시청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더 이상 보아 줄 수 없어서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시는 얘기,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 경실련 운동에 대한 의견, '월간 경실련'을 읽고 느끼신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메일 news@ccej.or.kr | 트위터 @cyberngo | 페이스북 facebook.com/ccejjustice | 전송 02-741-8564~8





경실련은 하루하루 시민과 함께 걷습니다



2014. 11

- 11.04 경실련 25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사진1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 독립기구로 설치하라' 성명 발표
- 11.05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사진2
'정부는 남북고위급 회담을 즉각 제안하라' 성명 발표
- 11.06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공동논평 발표
- 11.07 동서식품에 대장균 시리얼 유통거래정보 요청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는 영토주권 포기' 성명 발표
- 11.10 김영란법 위헌성 논란에 대한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 11.11 '정부조직 개편, 제 2의 세월호 참사 막을 수 있나?' 토론회 ▶사진3
'누리고정과 무상급식 재정책임은 국가의 몫' 성명 발표
- 11.12 경실련 25주년 기획토론회 ② - 한국경제 발전모델 모색 ▶사진4
- 11.13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관련 기자회견 ▶사진5
'제약사 대상 환자의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관련 법원의 패소 판결은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파탄시키는 것이다' 성명 발표
- 11.17 '경제학자가 본 최경환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시민단체 · 남북경협기업 · 국회 · 지방자치단체 공동기자회견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2014. 10

- 10.01 주요국가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교분석 보고서 발표
'대통령과 검찰은 기본권 침해하는 사이버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발표
- 10.02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으로 인한 시민불편, 안전사고의 책임은 서울시에 있음' 명심하라' 성명 발표
- 10.06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 ① : 부자감세 서민증세' 발표
- 10.07 황교안 법무부장관, 최경환 부총리 검찰 고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10.08 정부 주장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관련 30대 중점법안에 대한 평가 발표
'검찰 군PX 입찰비리 기소, 군피아 해결 계기 되어야' 성명 발표

- 10.09 '카카오톡의 투명성 보고서 발표에 대한 입장' 성명 발표
- 10.13 '남북관계 악화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성명 발표
'동아ST가 부당하게 취득한 약제비는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 성명 발표
- 10.14 지구촌반공퇴치시민네트워크 화이트밴드캠페인 ▶사진6,7
'국내 가구소득과 주택가격 변화 비교분석 보고서' 발표
'클라우드산업협회의 재벌특혜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반박 성명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정책의 수장 자격 없다' 성명 발표
- 10.15 국가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발표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훈령제정에 대한 교육부 항의방문
'추가 금지인하, 한은 독립성 및 가계부채 해결에 악영향' 성명 발표
- 10.16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피해자 모집 실시
- 10.21 제23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수상기업 발표 및 시상식 개최 ▶사진8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 ② : 소득재분배 왜곡' 발표
- 10.22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에서 의료계를 즉각 제외하라!' 성명 발표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 약기협상의 예외일 수 없다' 성명 발표
- 10.23 상품권 낙전규모 실태조사 결과발표
'근본적 구조개혁 없는 단기적 경기부양으로 경제적 폐해만 초래하는 최경환 경제정책' 성명 발표
- 10.24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주권국가로서 자주성에 큰 상처' 성명 발표
- 10.27 '정부는 합리적인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성명 발표
- 10.28 신혼가구 소득과 전세 가격 변화 비교 조사결과 발표
통일운동의 성찰과 과제 토론회
- 10.29 2014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및 우수의원 발표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정상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라!' 성명 발표
- 10.30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시민주거안정 위한 의지도, 능력도 없는 한심한 재탕대책' 논평 발표
- 10.31 경실련 25주년 기획토론회 ① - 경실련 25년, 시민운동과 경제정의 ▶사진9



사진6



사진7



사진8



사진9



사진10

* 경실련의 모든 성명 및 발표자료는 경실련 홈페이지 (www.ccej.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공

신입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전국 신입회원 136명, 가입일: 2014년 9월 17일~2014년 11월 19일)

(주)아이티엔티 최재천	이중석	유두석	박순옥	김현상	김종혁	김복자	권윤정	한국기	정종석	이재선	이동률	옥용석	
김남기	황인관	조이라	이민영	안성호	박승배	김현식	김주복	김봉미	권후남	지용희	정 진	이재윤	이만희
김은옥	(주)영임마트 최평규	임정중	유영민	안양수	박찬숙	남태현	김주호	김수만	함두호	천일봉	정해진	이재은	이재은
김철호	김동규	황제우	조용현	이민혁	유진호	안영숙	박행자	리드산업개발(주) 김지현	김경순	하창재	최승희	장혜승	장혜승
박상병	김집이	강신재	최혜경	임지은	이애화	유홍우	양기춘	방성호	문현정	김승효	김경훈	홍진호	최영희
신형섭	김태환	김문석	황호식	조은혜	임한수	이윤행	윤석구	엄태영	설동철	김지란	김시연	김길년	황은숙
우동훈	박석원	김정웅	강영희	표규열	조인순	장용덕	이은정	윤석진	예두크	박광호	김진경	김용재	김용재
이미경	신완철	김태환	김기희	강용수	하명희	조한옥	장 훈	이은지	리안트	손호상	박기은	김진길	김진길
이정향	원 허	박성은	김정택	김병의	강홍선	하옥란	주정순	정만중	윤영전	오소훈	송민수	박동석	박동석
조민상	이미경	심제원	김학실	김정현	김병철	구주영	하중률	주명식	이인섭	윤영전	오태훈	신경근	신경근

분부	경민수	권소영	김근철	김문환	김성태	김왕식	김재섭	김지호	김하나	나권일	문상준
과년도대학교수협의회	계종미	권순범	김기숙	김미경	김성필	김용남	김재일	김진구	김학수	나병희	문석진
한국신에너지경제조합	고강석	권순용	김기열	김미선	김성훈	김용득	김재하	김진만	김한나	나병현	문세영
(주)국동산업개발	고경일	권영준	김나리	김미소	김세운	김용석	김재환	김진명	김해성	나판수	문소상
브이앤비(주)	고동성	권영진	김남덕	김미진	김세중	김용섭	김정돈	김진수	김행선	남기원	문인섭
아름다운한의원	고영희	권영한	김남선	김민수	김세진	김용숙	김정수	김진아	김현동	남상권	문장협
피터엘먼트스텍	고은진	권오진	김남연	김민주	김소라	김용식	김정신	김진현	김현덕	남영진	문종원
고고하우스	고인수	권유규	김남훈	김병각	김승철	김용직	김정현	김진호	김현석	남원호	문차호
군산경찰서	고지석	권은희	김대균	김병구	김수영	김용찬	김정일	김찬동	김현성	남현주	문태현
김보라미	고진강	권윤정	김대선	김병성	김숙희	김용철	김정중	김찬석	김현수	남호원	문현정
가상준	고행산	권일학	김대성	김병수	김순보	김용철	김정환	김찬형	김현욱	남호현	문호준
강경수	고형석	권일민	김대중	김병수	김승보	김용태	김정호	김찬호	김현정	노경택	문 희
강국신	고홍민	권준기	김대현	김병주	김시연	김용하	김정호	김찬주	노연숙	민남미	
강내원	고희은	권준석	김대호	김병학	김시영	김용호	김정호	김찬범	김현주	노연경	민병욱
강대욱	공병욱	권준우	김대훈	김병호	김애자	김우비	김정훈	김창식	김형규	노우호	민선욱
강덕순	공정표	권 찬	김도준	김보경	김양규	김원석	김종걸	김재윤	김형균	노재훈	민승현
강명구	공진하	권철민	김도형	김복환	김양수	김원태	김종근	김 천	김형원	노정호	민희숙
강문희	곽기훈	권태환	김도희	김봉곤	김양진	김유룡	김종덕	김천성	김형조	노진주	박건영
강민구	곽남준	권향년	김동구	김부경	김연주	김유진	김종록	김천중	김형준	노태균	박경애
강상구	곽새별	권혁민	김동규	김 삼	김연주	김유찬	김종목	김철주	김형진	노희철	박경준
강선미	곽지웅	김기배	김동규	김상경	김영경	김유환	김종민	김철호	김해경	단호섭	박교영
강성주	곽효석	김경모	김동균	김상균	김영미	김윤기	김종배	김철홍	김혜련	라운희	박기영
강영식	곽희남	김경배	김동욱	김상균	김영복	김윤두	김종섭	김철환	김혜숙	류경수	박기철
강원호	구경이	김경수	김동호	김상영	김영선	김윤태	김종숙	김철환	김혜순	류도암	박기훈
강은현	구길두	김경수	김동환	김상영	김영선	김윤희	김종우	김치수	김 호	류동훈	박남규
강원환	구성찬	김경운	김동훈	김상우	김영순	김 용	김종환	김태균	김호경	류명현	박남수
강재혁	구수정	김경준	김득기	김상중	김영실	김은영	김주영	김태수	김호균	류시문	박노건
강정희	구지홍	김경철	김만수	김상현	김영은	김의수	김주영	김태수	김호성	류연희	박노현
강주현	구정모	김경호	김만호	김상수	김영재	김익수	김주중	김태완	김호식	류지성	박다진
강지영	구혜인	김경호	김면중	김석환	김영주	김인곤	김 준	김태진	김호연	류충렬	박두영
강진영	권경무	김경환	김영균	김선필	김영주	김인선	김준배	김태현	김홍관	류형욱	박미나
강창걸	권구혁	김관영	김명기	김선희	김영준	김인숙	김준석	김태현	김홍권	류화근	박미선
강창구	권규향	김관용	김명목	김성균	김영준	김인영	김준식	김태형	김홍규	마미영	박민준
강창균	권동현	김광현	김명애	김성수	김영철	김인태	김준영	김태호	김홍수	맹광영	박병근
강철규	권득용	김국주	김명인	김성숙	김영출	김인호	김준한	김태환	김효선	맹성렬	박병섭
강철승	권봉철	김구해	김명철	김성연	김예승	김일수	김지연	김태훈	김효원	문경식	박병오
강태경	권상웅	김구범	김명환	김성일	김원래	김재구	김지영	김태훈	김희규	문광기	박병욱
강혜정	권상주	김구훈	김무준	김성중	김원배	김재구	김지혜	김태훈	김희영	문금희	박병일
강홍천	권성윤	김근수	김무환	김성천	김원욱	김재길	김지혜	김평진	김희철	문미란	박상대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공

박상렬	박종근	배유아	손호중	안용식	원홍식	윤종호	이동환	이수연	이정희	임 삼	전정호
박상성	박종석	배인명	손희경	안인화	유관영	윤종식	이동현	이수영	이정희	임서구	전정재
박상혁	박종선	배장수	손희준	안정혜	유관준	윤지성	이동호	이순기	이종건	임성희	전창훈
박선희	박종소	배종석	송강욱	안종범	유기석	윤진철	이동호	이순배	이종규	임세운	정경수
박성배	박종원	배희숙	송기민	안종한	유기선	윤치업	이만호	이승기	이종길	임용기	정경욱
박성용	박종태	백복수	송기성	안지현	유기천	윤한필	이명천	이승대	이종수	임용섭	정권용
박성정	박주은	백요한	송미영	안진걸	유기청	윤효상	이명훈	이승섭	이종욱	임장원	정기만
박성혁	박준수	백은정	송병록	안진호	유기현	은역수	이모세	이승용	이종윤	임정규	정덕임
박성훈	박준영	백정숙	송수영	안철원	유남식	이갑수	이무송	이승우	이종후	임종필	정명채
박세훈	박준철	백진현	송용석	안현구	유덕열	이강운	이민아	이신호	이종훈	임창민	정미숙
박세훈	박준철	법 등	송원기	안효정	유동진	이경도	이민우	이아리	이주아	임태영	정범석
박수경	박지은	변동철	송철주	안희숙	유동훈	이경수	이범석	이연석	이주하	임현진	정병록
박순기	박지혜	변상해	송인섭	안희철	유병상	이경숙	이병재	이영광	이준길	임희윤	정병순
박승상	박지호	변재근	송인윤	양광희	유병서	이경우	이병관	이영관	이준영	임희청	정병오
박승욱	박지호	변준섭	송태교	양대규	유성하	이경준	이병주	이영림	이지영	장경완	정성룡
박승진	박지환	시동천	송하동	양두석	유 승	이경태	이보실	이영범	이지훈	장경태	정석희
박양재	박진규	서경호	송호영	양부식	유영춘	이경호	이봉숙	이영욱	이진경	장동민	정선철
박영규	박진순	서순탁	신규철	양비화	유인상	이경훈	이봉훈	이영을	이진영	장병호	정선해
박영규	박진홍	서승환	신근택	양세웅	유인환	이경희	이삼열	이영중	이진원	장보름	정선화
박영기	박찬영	서영덕	신동조	양승두	유일용	이근섭	이상덕	이영채	이창섭	장삼기	정성봉
박영남	박창민	서완석	신동진	양연식	유장연	이광섭	이상룡	이영현	이창엽	장서림	정성심
박영민	박창임	서용욱	신동희	양원표	유재민	이광용	이상선	이영호	이창효	장석춘	정세진
박영수	박철수	서윤석	신두철	양윤숙	유재욱	이광필	이상엽	이용만	이창희	장승진	정세훈
박영웅	박치권	서은경	신봉기	양인준	유재일	이광택	이상엽	이용배	이철우	장성영	정승상
박영철	박치우	서정일	신봉승	양창우	유재중	이광필	이상우	이용선	이춘수	장영식	정승준
박영환	박대만	서종대	신봉진	양태훈	유재혁	이광현	이상윤	이용한	이태섭	장영오	정승화
박용석	박대선	서종철	신승연	양희승	유종성	이규용	이상윤	이윤향	이태영	장영환	정연섭
박우룡	박태영	서직원	신승우	엄원중	유진호	이규용	이상진	이원식	이태진	장욱숙	정연태
박우석	박한용	석기영	신영철	엄인수	유철우	이규철	이상철	이원재	이필생	장유리	정영만
박원규	박한호	석철수	신영철	엄홍길	유평준	이균성	이상필	이원재	이학수	장유환	정영식
박윤희	박행우	선동수	신원기	여은희	유해신	이근식	이상현	이원희	이한길	장은미	정왕규
박은아	박현진	선종국	신용규	여해경	유항임	이근태	이상희	이윤규	이한민	장용선	정용택
박은준	박형근	설원식	신은정	염규석	유희숙	이근행	이석교	이윤배	이한섭	장중철	정용화
박은현	박형삼	설창인	신은정	오동엽	윤건수	이근환	이석규	이윤상	이현미	장철기	정운수
박용순	박혜란	성광식	신재원	오세정	윤경로	이금희	이석기	이윤호	이현석	장형환	정원철
박의경	박호걸	성금성	신정무	오세호	윤경숙	이기승	이석범	이은용	이현석	장혜령	정원희
박의웅	박호영	성병화	신지영	오순택	윤대현	이기우	이석제	이은재	이현숙	장희곤	정윤희
박이규	박홍순	성 신	신철영	오승훈	윤동열	이기용	이석진	이의영	이현재	전광호	정의정
박인구	박화자	성원규	신현호	오원준	윤득구	이기종	이선신	이익모	이형세	전근수	정의정
박인선	박후근	성윤숙	심대보	오일석	윤상균	이기현	이선태	이인영	이형희	전기호	정인호
박재갑	박 훈	소경섭	심순혁	오장환	윤성권	이낙원	이성계	이일권	이혜진	전대홍	정일용
박재완	박휘영	소순창	심재형	오해승	윤성희	이남경	이성계	이재강	이호경	전병순	정재은
박재익	박희령	소진성	심홍진	왕은미	윤숙자	이다혜	이성구	이재걸	이호섭	전병식	정재진
박재천	박희선	손건일	심후연	우성훈	윤순철	이다영	이성규	이재림	이호영	전봉양	정정래
박정교	반철진	손무길	안규창	우지영	윤영곤	이덕희	이성근	이재욱	이호욱	전봉진	정재용
박정민	방상윤	손병권	안기정	원 국	윤영천	이동석	이성복	이재만	이희영	전상룡	정중원
박정석	방정혜	손병호	안병노	원대환	윤윤식	이동석	이성숙	이재은	이희주	전상욱	정주연
박정석	방중수	손성일	안병화	원동환	윤은선	이동석	이성재	이재환	이 훈	전성인	정준수
박정식	배승철	손승태	안상용	원영진	윤인오	이동석	이소영	이정남	이훈섭	전성철	정중식
박정환	배영기	손재은	안영호	원재환	윤일성	이동주	이소현	이정영	이희국	전용배	정진식
박제호	배영환	손정아	안영훈	원종호	윤재웅	이동준	이승수	이정현	임근욱	전용일	정찬신
박제화	배용근	손종보	안완용	원혜영	윤종빈	이동준	이수연	이정희	임영호	전우영	정창률



정창운	조형준	최영식	함동균	강순주	오세형	김은수	임영선	이혜란	김금연	이진아	김수진	반호임	이장영	경주공원요원	양철영	강희규	남윤화	신시은	이혜수	홍경미	김현모	선종아	이재운
정태근	조희근	최영철	함두호	강준모	원민철	김장철	임을출	임호창	김남두	이호진	김숙정	방미자	이장표	(주)제일금속	엄권섭	강희범	노경임	신윤철	이혜진	홍경순	김현석	설성욱	이정근
정태영	주관수	최원영	함형욱	고일두	유영모	김재기	임형섭	정길채	김남영	장선애	김순향	배동주	이정택	휴먼뱅크(주)	오영석	고원철	노병일	신은숙	이호석	홍진호	김현중	소병환	이정미
정태민	주상희	최원천	허남중	곽 도	이동근	김재원	임홍승	정홍준	김동영	전규화	김승권	배수중	이창섭	제갈음미	우중철	고재원	노용래	신혜진	이호열	황동식	김효성	손성만	이정학
정태성	주아름	최유영	허병권	곽충삼	이만희	김정웅	장인석	차종석	김동현	정석중	김승한	백세정	이창훈	강정덕	우호식	고정민	노혜숙	심혜진	이효성	황재연	나병철	손호상	이창호
정태완	주용학	최윤재	허 석	구용현	이명수	김정진	장형원	표정호	김봉래	정세환	김양곤	백순환	이철용	강지영	윤병길	곽준석	노희준	안경애	임재욱		노남수	송경용	이학균
정태철	주찬식	최은진	허수범	구자훈	이병준	김정현	전미옥	하능식	김석래	정의호	김영춘	백승일	이형로	곽정섭	윤정수	구교형	류미숙	안명자	장영기	광주경실련	노영필	송광운	이형모
정한균	지동익	최은진	허원철	권영진	이순배	김제천	전영선	홍창식	김선연	정의훈	김옥덕	서주중	임양희	권기흠	이 관	권도형	류정희	안철환	장지은	(주)영일마트	노용주	송승중	이형호
정해석	지정희	최은철	허익배	권 일	이양재	김주호	정동욱	황은경	김선정	정현석	김운운	손은희	장남수	권성택	이규찬	권순남	박경옥	양금석	전광섭	(주)해양도시가스	류경순	송원식	임기춘
정혁제	진석수	최인숙	허지영	김경희	이유미	김진환	정명숙	황정호	김은호	조남환	김용재	손정식	장석주	김경대	이동호	권용완	박계량	양정현	전종석	(주)버스조합	류석렬	송윤주	임동훈
정해경	진영수	최장원	허창환	김광민	이은재	김태환	정명자		김재부	조무현	김원용	손진일	장은영	김경호	이미경	권 혁	박광수	양철원	정병오	강대욱	류이중	송태석	임영범
정혜승	진유식	최재천	현승근	김금옥	이재문	김학성	정승훈	시민권익센터	김재준	조영미	김윤경	송미량	전갑생	김관열	이상기	권혁이	박미경	오명희	정상섭	강상호	류종회	신기완	임형채
정혜진	진유난	최정표	형성훈	김기성	이정식	김형만	정연규	대호관세사법인	김정근	진수환	김의아	송수영	전기룡	김기석	이상수	김경태	박미영	오민석	정상영	강진주	류현범	신재안	임형철
정혜희	차은상	최종석	홍광선	김대용	이제선	노귀남	정창현	김강준	김중남	최규천	김정주	송승일	정문기	김기중	이상우	김경표	박미정	우동훈	정애숙	강오일	류현호	신주환	장시영
정희성	채두병	최종일	홍대식	김덕기	이주희	당명숙	조광환	김석배	김진숙	최복규	김정택	송정일	정보건	김동영	이상락	김경화	박민관	우병설	정용연	강은섭	마재필	심재훈	장은진
정효진	채민성	최종철	홍도천	김도영	이창수	류길재	조성아	김태룡	김진욱	최상경	김종태	신미경	정석윤	김만근	이성민	김기영	박민영	원범재	정원이	강정미	모상근	안상록	장 익
정희창	채병철	최준용	홍미미	김동식	이현주	류현정	주석부	나태균	김태희	최송길	김종현	신미애	정영현	김만규	이성조	김남권	박복임	유수연	정인애	강훈열	모현숙	안태욱	장진호
조강희	채예정	최종길	홍선표	김미경	이희승	문형규	차승주	박병식	김형경	최순희	김창행	신 속	정종화	김상길	이원희	김남현	박선애	윤명숙	정중한	고은옥	문정찬	양명희	장형순
조건영	채원호	최지민	홍성균	김석기	임경수	박금해	최교열	박인동	노영성	최승룡	김충곤	신용호	정지영	김성택	이정윤	김남희	박성배	윤승형	정지선	공인주	문혜옥	양정규	전병환
조경민	채준하	최지한	홍성환	김세용	임창규	박미라	최우진	서경수	류형춘	최승찬	김판희	신진영	제문규	김양선	이홍근	김다솜	박성화	윤영호	정하준	곽상원	문 희	양진환	전용준
조광현	천기웅	최지현	홍성훈	김 영	임형백	박순창	최호창	신은숙	박광수	최은송	김필성	신진홍	조민영	김연옥	전용범	김동범	박승원	윤종미	정학균	곽상희	민문식	오경례	전창주
조광희	천대웅	최지훈	홍순엽	김재령	장명진	박영희	한광수	신희권	박순남	최재현	김한주	안미나	조병호	김영화	전진대	김복분	박영재	윤진원	정혜경	구혁신	민병우	오경서	정강택
조규홍	천민승	최창배	홍순영	김재익	전은호	박용주	한정훈	유우성	박은남	한동준	김한표	엄수훈	조승재	김인수	김정제	김봉화	박옥남	윤창일	정혜선	기창선	박경아	오승훈	정광우
조민상	천병우	최태영	홍인표	김정인	정성훈	박용현	황대중	윤상경	박인재	홍용표	김호일	엄정태	조은배	김중구	정병우	김상욱	박은경	윤 철	정희균	김경현	박광복	오주섭	정두수
조병익	천승길	최호영	홍종학	김정철	정애리	박은주	황지연	이대순	박종시	홍진원	나기석	엄성범	조하배	김중구	정석호	김수진	박재금	이강순	제강록	김영영	박남규	오지혜	정보경
조성호	최갑모	최효용	홍준표	김종길	정인환	박주승	황상철	이덕우	박지호	황상철	나양주	여정애	조하배	김철년	정연권	김승복	박재철	이기영	조경봉	김기봉	박병기	오지홍	정성문
조성태	최광규	최홍식	홍준현	김찬호	조재형	박준우	황은남	이명근	반태연	황은남	남기원	오성관	지영배	김철수	정용길	김승복	박재희	이말복	조광진	김기홍	박병일	유 현	정석훈
조성희	최광섭	최홍엽	홍진규	김형욱	최길림	배인교	강명철	이석형	배정순	남덕희	남덕희	오성주	진성우	김태식	정진철	김애란	박정욱	이명숙	조아라	김길현	박성용	윤두중	정영훈
조성희	최광현	최희수	홍창기	김호현	최두호	백인용	강보라	이순기	서은주	거제경실련	남원식	오정림	최심주	김해숙	정형호	김연옥	박종기	이미선	조윤상	김남기	박성원	윤봉란	정용완
조순열	최근목	최희수	황경복	나인수	최영철	백학순	곽수근	이영길	송문길	기산중합건설(주)	남희정	옥근호	최성수	김형환	조덕수	김영근	박종미	이미희	조은하	김남수	박성수	윤봉영	정원태
조순호	최다정	최희준	황광하	노두승	최윤정	변상호	구종권	이지연	송민석	강경수	노석현	옥두표	최성수	김홍규	조봉래	김영미	박준서	이병득	조태섭	김동준	박수인	윤상영	정은수
조연정	최덕천	추동균	황기명	노용래	최정우	서관승	김동우	이 진	송재석	강성배	노재남	옥방호	최쌍중	김홍규	조영화	김용길	박진기	이병렬	조홍식	김미남	박양우	윤영수	정일용
조영록	최덕호	탁 민	황도수	류성룡	하상우	성재상	김만환	이창수	신미영	강애리	노재천	우병훈	최양오	김홍기	최병창	김원선	박춘선	이병순	주영식	김민정	박욱관	윤원진	정중현
조용기	최동민	표규열	황 민	류종석	손세창	김소연	김소연	이태호	신성진	강윤영	류규렬	우정숙	최윤용	류창열	최병철	김윤권	박혜정	이병철	주태진	김병철	박인철	윤재철	정진철
조윤정	최동욱	하성준	황민호	민병기	쌍경실련동일협회	송용석	김중상	장 영	신승춘	강정숙	문상필	우정숙	최윤숙	마태근	최상호	김윤옥	배권식	이복자	주현자	김성석	박정주	이경환	정찬용
조은숙	최영희	하용호	황선용	박경남	선월홍산	신경화	김지환	장진영	심규만	강정호	문철봉	원순실	최은정	문성현	김윤재	김윤재	변미애	이부순	지미선	김수영	박종렬	이동민	정행섭
조은호	최 민	하태주	황선영	박상위	강만성	신종성	김 혁	장호죽	심원보	강학도	박광호	조일흠	최병오	하현아	황선영	박성우	강은석	안춘훈	노영록	전찬찬	박대기	이만희	정현오
조일흠	최병오	한광덕	황신준	박영웅	고석주	위정희	문인철	전태석	심현섭	경명자	박대기	유차상	최현미	박봉찬	최임석	김은자	서방자	이성숙	이성진	차성미	김영규	박창기	이상걸
조재연	최병호	한광덕	황신준	박영웅	고석주	위정희	문인철	전태석	심현섭	고석진	박명옥	유천업	추현철	박인관	최 정	김은진	서순자	이성진	최경화	김영길	박창석	이상동	정혜련
조재원	최봉문	한기훈	황영미	박인순	고유환	이기자	박상안	정경수	원경숙	고영주	박성호	유태영	한기수	박종희	최진진	김의찬	서용원	이승재	최미영	김영목	박철용	이상주	정환규
조정근	최석준	한동운	황옥분	박재호	곽일환	이명자	박익범	조영관	윤도현	권민호	박수정	윤강원	한장용	박찬진	최준자	김종임	서유리	이승봉	최상철	김영범	배용태	이상재	정환승
조종철	최성수	한성훈	황유경	박정윤	권수복	이승규	백삼균	조 현	윤성원	권순남	박수진	윤길정	허원영	반종국	최현익	김진경	서이석	이승희	최승희	김영환	배종국	이상근	정환채
조준범	최성실	한석용	황이남	박찬우	김근식	이우영	백승호	추승우	윤영호	권형준	박순옥	윤정미	허추구	방현주	최홍배	김진숙	서태원	이양희	최철규	김은영	백상일	이상길	조교영
조준형	최성주	한선아	황이숙	박희정	김동범	이익현	백종효	추승우	이광중	김경섭	박용안	윤종운	허희경	배의용	하재훈	김현정	석학주	이연숙	최후식	김인수	백 석	이승준	조성식
조진만	최성현	한승구	황인구	배용규	김동환	이재선	성호준	이귀녀	김귀호	박원열	박원열	이강석	현정임	배철용	한동훈	김현희	성인숙	이영신	추규호	김일호	백영기	이승훈	조승유
조진수	최성훈	한승호	황인선	백은정	김민식	이점호	손창민	강릉경실련	이숙희	김민수	박정기	이길중	홍성태	서경석	김해숙	김해숙	송쌍옥	이영희	하숙례	김재서	백인순	이 연	조재근
조진오	최수진	한승호	황정우	백인길	김병조	이정우	송은학	한남대학교병원	이요한	김상일	박준기	이미경	황남훈	서홍기	김혜정	김혜정	송혜정	이원영	한공희	김정훈	백중기	이영훈	주호연
조춘수	최수진	한영관	황철진	서민호	김삼수	이중수	여은미	강남일	이윤일	김상천	박추홍	이산학	황점득	손영섭	강 님	김효숙	신귀분	이윤식	한창욱	김중하	변동철	이윤순	지명순
조태임	최순영	한용석	황호식	신행학	김성호	이종민	윤언철	고석태	이정임	김석준	박태원	이상귀	황정원	손영택	강성철	김희수	신동렬	이재길	허기용	김지중	봉형균	이은방	지병근
조한욱	최승섭	한철희	황효열	심영길	김수동	이진만	이덕호	구광범	이제영	김선식	박한수	이상용	이상천	손용락	강옥희	남기표	신민선	이재춘	허정호	김철현	서민호	이인수	지창환
조한희	최신애	한홍열	심재민	김용수	이현희	이승훈	권상동	이주석	김성진	김희자	박희자	조현철	이상천	경주경실련	신수철	강옥희	남민화	신복인	이종석	허정은	김홍식	이상기	채욱진
조현철	최영수	함동균	쌍경실련도시개혁센터	양우현	김용현	이화용	이종하	권오석	이지은	김수영	반창오	이양식	이창(철우스님)	안경복	강찬호	남상경	신성은	이하나	허창순	김해룡	서정훈	이재원	천재영



천홍석	김철광	이상도	박은아	이순애	이두열	김지현	이재민	김광호	손대근	전혁구	김명숙	명근홍	배영철	이영춘	조용호	㈜경성에너지	김기야	김영길	김호범	박영숙	석진열	심윤정	이도준
최동기	김현미	이성철	박지숙	이유설	이부형	김진숙	이종경	김기수	송영환	정상희	김명진	모지환	배철선	이우리	조윤희	㈜부산관광호텔	김갑환	김영욱	김홍재	박종주	석태호	심재천	이동률
최영남	김휘연	이수영	서지만	이종원	이선주	김진호	이진태	김기오	송인걸	정예성	김명철	모창용	백재봉	이윤선	조인수	㈜트리플에스엔에스	김경민	김용섭	김홍휘	박용하	선다윗	심형철	이동열
최용석	김휴진	이시호	심구만	이해중	이선화	김창수	이진현	김대석	신수용	정우택	김문재	문세영	백정심	이인수	조준범	이창재(경성유압)	김경일	김용원	김훈태	박용한	선석렬	이영아	이동원
최정구	김희덕	이영애	심영배	이희재	이재홍	김창완	이진희	김동선	신창호	정인구	김미라	문연철	백정애	이재광	차경아	㈜에스클	김경조	김원태	김희곤	박재본	설광석	안기영	이동윤
최주영	김희철	이옥희	원유환	임구원	이정수	김태우	이창용	김동언	신현진	정진숙	김미란	문명덕	서다정	이정진	채성삼	좋은데이	김경택	김윤영	남경태	박재우	설동경	안도호	이동진
최준영	나호훈	이원재	이지수	장순환	이종기	김현태	이태용	김문영	신희권	정철성	김미주	문 웅	서미화	이종화	천병식	황보승희	김경화	김은숙	남기찬	박재욱	של원출	안명석	이동훈
하성택	노상진	이원희	임용선	정경조	이종준	남운환	이해숙	김병국	신희영	정현재	김미혜	문준석	서이재	이찬식	천재관	강경태	김광식	김인한	남영현	박재홍	של호석	안성관	이동희
하주아	라병희	이은혜	장옥남	정태영	조승현	남민철	이형태	김상환	안광정	정희대	김민성	민경준	손영선	이창환	천지연	강귀원	김광희	김인환	노경조	박진숙	של덕주	안영철	이만수
한 샘	류시건	이정건	정남수	조용석	조용문	노영희	이희동	김승일	안남주	조성현	김민희	민찬홍	송미승	이준엽	천현중	강규성	김남일	김재일	노명수	박종덕	של민우	안원하	이명성
한신구	류충남	이제수	최 웅	조재용	조정현	류학근	임종우	김영기	안병진	조용태	김민희	박강일	송영중	이병일	최경아	강대영	김대래	김재일	노병곤	박종석	של병창	안재민	이명식
한원정	한광수	이중률	한광수	주상익	조중석	맹일영	장영규	김영모	안영찬	조윤제	김상례	박광배	송진호	이한경	최구호	강대익	김 도	김재찬	노상훈	박종수	של영미	안종일	이명진
허기석	박경삼	이중우	홍관표	차숙희	주현석	박병준	장은숙	김영종	안윤홍	조은호	김상원	박근영	송홍범	이현중	최 동	강미라	김동명	김재훈	노영욱	박준순	של영희	양동열	이미경
허문수	박상우	이창형	홍기원	최경용	채신덕	박재범	장호경	김영주	안재준	조철휘	김상진	박금자	송희진	이형오	최명식	강민석	김동호	김정각	노일용	박종홍	של병열	양재화	이병호
허 탁	박성도	이철수	최충식	최일환	변부형	정호열	김영희	안종대	조항범	김선미	김선미	박나영	신관용	이홍식	최병기	강민수	김동훈	김정수	도환영	박진성	של봉주	양종필	이상백
홍기태	박순이	이태동	군포경실련	하은호	최재웅	서정옥	전상훈	김 욱	안종훈	진동규	김선실	박병철	신우기	임일용	최연식	강민정	김두중	김정숙	류강렬	박진용	של상용	양지현	이상은
황동현	박용자	임은기	럭키빌딩	한성수	한성식	서중철	전영평	김원희	안진주	진동섭	김선홍	박석일	신재범	임종석	최영란	강병석	김명석	김정순	류위훈	박찬일	של영일	염세원	이상진
황윤용	박응도	임주석	곽윤열	호희국	한재혁	서창현	전재호	김용배	여일구	차정민	김성두	박성권	신주환	장 미	최완수	강성권	김문규	김정택	류종성	박창식	של정환	오상준	이상득
황인섭	박재욱	장도익	국정아	홍순권	허우섭	성광기	정경선	김재경	오세윤	최경훈	김성철	박성일	심재경	정안심	최윤정	강성태	김미향	김정현	모상선	박철중	של철홍	오상환	이석주
박정구	장문석	김대욱	황윤경	홍석만	손광락	정성운	김재석	오원관	최봉문	김소미	김소미	박성진	안영하	정은경	최인권	강승희	김백철	김종구	문규성	박철한	של치훈	오영자	이선희
구미경실련	박주영	장세광	김동별	홍성도	손상홍	정순천	김정기	오충섭	최장환	김수경	김수경	박세훈	안창언	장종국	최 일	강시영	김범준	김종기	문영순	박태순	של문숙	오철조	이설하
김요나단	박창재	장민철	김민형	김포경실련	황인문	손승완	정창길	김종구	오학석	최정우	김승호	박소영	양명희	전준국	최재경	강예윤	김병곤	김종민	문재천	박태주	של승아	오태석	이성권
강승수	박항숙	장종길	김석현	<small>대한에너지그룹(주)김포지점</small>	황인순	송영식	정태완	김종기	우금욱	한경이	김승환	박송춘	양승희	전철균	최종영	강유창	김병용	김종우	문창호	박한규	של순수	왕 인	이성림
강신우	박형진	장준우	김연승	<small>조용세(명신한의원)</small>	신영석	조락현	김종천	우희창	한신희	김신규	김신규	박수민	양영주	전철영	최준길	강재현	김병하	김종철	민경국	박환란	של은주	우도균	이성림
오영호	배인호	장훈성	김영희	<small>㈜신원렌티카</small>	대구경실련	신병철	조인지	김종하	원용철	한성림	김영만	박수옥	양의열	정병수	최현이	강재호	김복준	김종한	민현선	박현욱	של재광	우명자	이성현
구자근	김승국	전재돈	김남규	강연환	안영석	조정학	김진숙	유인규	한영일	김영삼	김영삼	박승재	양인영	정병수	최현철	강정규	김봉국	김주영	김경주	박혜정	של재은	우성철	이성훈
권구일	백승호	전호갑	김창호	김문경	강호욱	안정향	조찬호	김진창	육종근	한정화	김영태	박승선	양판승	정삼수	최호길	강주하	김봉수	김주현	박관수	박종재	של승숙	원상순	이상희
권 보	변정도	정석광	김희모	김미자	공영선	안화석	조창래	김충신	윤석원	한화교	김영환	박승식	어성준	정석우	최홍림	강중욱	김부민	김주호	박광민	박환진	של승두	유상일	이승호
권순서	소평진	정재봉	문성익	김영로	공재식	양대환	차진근	김태현	윤여진	황돈영	김예영	박승옥	여규옥	정석희	최홍윤	강태문	김분이	김주화	박남희	박희정	של홍준	유영명	이영갑
권순형	신미정	정진수	박순열	김옥순	곽덕환	엄봉훈	채우길	김태형	윤주병	황의달	김용수	박영용	여순임	정승임	최환석	강필원	김삼문	김준기	박도영	방성애	של신경근	유완식	이영신
권윤택	신주식	정택균	박영미	김운섭	곽성기	엄희만	최우곡	김태형	윤태희	김윤	김 윤	박용목	오승주	정애자	최 훈	강해상	김상배	김준기	박도영	방옥자	של신군재	유재엽	이영호
길윤옥	심재필	정택동	박윤춘	김창집	권기억	여은상	최원아	김태호	이건희	목포경실련	김재철	박인용	오장택	정영대	하상복	강현주	김상호	김진봉	박동범	배덕광	של신만석	유재중	이욱형
김경훈	심정규	조경래	박정민	김철경	권기혁	여택동	최종만	김태훈	이계자	강남길	김정민	박인철	오정수	정영주	하지선	경규성	김석준	김진영	박동일	배성훈	של신병훈	유정동	이위덕
김낙관	안세찬	조용현	박종수	김형창	권유집	유우열	최준호	김현택	이광자	강병국	김정아	박정석	우진호	정원재	한건준	고명석	김석준	김진찬	박두춘	배수미	של신상구	유종석	이유식
김덕중	양남숙	지대근	박평식	나기찬	권휘동	유성호	최한석	김현하	이광진	강병조	김정웅	박정희	원요준	정원중	한경자	고수남	김석호	김진필	박미순	배유한	של신성진	윤강훈	이은경
김동욱	양영애	최근애	박희찬	남기후	김대석	유영환	하순화	김형태	이문지	강성태	김정주	박종득	유경생	정주희	한상호	고인홍	김선년	김철도	박미영	배종출	של신세민	윤남열	이은화
김동환	양진우	최낙렬	석경수	도현수	김도영	유왕근	하종호	김혜천	이병승	강영태	김종구	박종석	유광호	정준택	한승주	고재일	김선미	김춘덕	박민우	배혜래	של신수진	윤상미	이정민
김문환	엄상섭	최연호	성시규	류문식	김도한	윤태우	한상우	도남선	이봉호	강제석	김종숙	박종철	이상보	정진대	한승현	고정연	김선희	김태경	박복용	배화숙	של신승균	윤석준	이정식
김보준	오영재	표상욱	손 산	문태식	김동석	윤현식	한상인	명물식	이승용	강주천	김종익	박주이	윤영선	정진아	한태연	공병승	김성권	김태구	박봉수	배대영	של신영호	윤성미	이정주
김봉교	유영영	하영백	심재숙	박경자	김동일	윤홍식	현석한	문경재	이영수	고석규	김종호	박찬수	윤치술	정충무	허주현	곽원병	김성근	김태용	박상명	변재우	של신용현	윤수성	이정향
김연고	윤달근	한민규	안종호	박영훈	김명혜	이노수	홍희창	박상훈	이용훈	고유나	김준형	박창수	이경선	정충복	홍건숙	구경희	김성길	김태우	박상병	부두봉	של신우천	윤재성	이정호
김윤희	윤상훈	허 진	오태화	박정민	김무중	이덕우	황광석	박성진	이인세	고재우	김창세	박창윤	이경환	정평국	홍광은	구명중	김성수	김태희	박석원	서경국	של신형희	윤재철	이정환
김은희	윤임식	홍화분	오혜석	백종일	김상용	이도현	황귀선	박육용	이재영	곽윤경	김태중	박철수	이난희	정혜수	홍국선	구주영	김성춘	김해몽	박선용	서무건	של신철성	윤정선	이정훈
김인순	윤종석	유병주	신명순	김상진	이미정	박종대	이정호	박종대	이정호	곽윤경	김태중	박한호	이덕일	정호원	홍근표	구효승	김성태	김현욱	박성수	서봉원	של신홍기	윤필원	이조경
김인중	이관순	군산경실련	유숙희	신순철	김석태	이병화	대전경실련	박종석	이종범	국방현	김태현	박혁진	이도홍	조기석	홍서준	권명섭	김성호	김현재	박성철	서성희	של신해경	이갑준	이종림
김재훈	이덕수	강왕근	유애순	심상용	김선희	이상천	강태현	박준혁	이창선	권인철	김하성	박현희	이명희	조미경	홍순길	권범현	김세한	김형권	박성하	서수금	של신형생	이강진	이종원
김중배	이명숙	고재근	이경은	안재범	김수원	이상필	고제열	박희조	이학재	김경욱	김하현	박해영	이문희	조성국	홍진표	권수범	김수미	김형균	박성호	서양수	של신형남	이경숙	이종철
김중율	이명희	고덕영	이광석	양영재	김영모	이상화	곽영교	방명덕	이현호	김경철	김홍석	박해진	이범수	조성환	황근주	권오성	김수자	김형수	박승갑	서종석	של신현무	이경학	이종학
김준호	이미경	김동근	이상윤	여중석	김윤상	이선혜	구남혁	배동국	장복수	김광배	김희환	박효민	이상권	조수형	황대승	권오혁	김순애	김형천	박승제	서창근	של신해숙	이귀순	이종화
김준희	이미숙	김민재	이상춘	오인순	김윤호	이승엽	권오택	백미옥	장형근	김광창	니지애	박홍식	이상호	조순교	황정경	권외복	김승훈	김혜경	박연수	서현식	של신심미	이규현	이주환
김진억	이병덕	김영혜	이석진	윤명자	김재범	이연재	권철명	백정웅	장화식	김남식	노경수	배근미	이성로	조영교	황정경	권태섭	김쌍우	김혜경	박연수	서현식	של신심상	이남걸	이준승
김진희	이병문	노치우	이신덕	이금순	김중용	이장수	김건희	성기석	전영춘	김대근	노경윤	배상기	이세현	조영석	부산경실련	길태호	김영관	김혜연	박영봉	석승희	של심상	이남중	이진수



반기숙	안미숙	유재순	이석환	이천수	전익수	진재원	한덕이	강석철	김연중	박성은	오원선	이준한	조동암	전주경실련	이서경	이희수	김승필	조남섭	안동규	김행조	전종환	강현구	김병우
방미연	안병운	유재춘	이 선	이철희	전홍구	차동환	한돈집	강선옥	김영구	박성인	오대훈	이중량	조용철	강만근	이승현	임영관	김승훈	조문수	예규현	김혜영	정미주	강호문	김병준
배경희	안봉섭	유대무	이선경	이춘석	정계화	차준은	한만준	강승진	김영국	박수영	우수홍	이진숙	조용화	강현균	이 정	임호성	김시영	조부연	오희석	김홍원	정병인	강호승	김병철
배재준	안신실	유학선	이선미	이충일	정병관	채옥희	한상화	강옥엽	김영수	박신숙	유동현	이찬우	조인숙	강호수	이현희	정승룡	김양보	조시중	윤선한	김홍철	정은양	경준용	김봉일
배정수	안재영	유혜란	이선정	이충환	정선옥	채홍철	한상화	강정호	김영준	박옥희	유정은	이찬우	조지영	곽이구	임명진	최종범	김영아	좌광일	윤종도	나이란	정윤세	고영구	김봉주
배중열	안정민	윤광석	이성규	이태용	정성기	천기영	한순택	강태경	김옥산	박용해	유진성	이창숙	조현준	곽홍규	임성진		김영희	한남석	이동하	남명희	정치화	고영재	김상규
백승민	안창호	윤남선	이성훈	이판용	정순현	천병기	한연숙	고덕봉	김요한	박정훈	유창민	이창훈	조희선	권대규	전기환	제주경실련	김용범	한영조	이성호	노덕우	정하진	고용길	김상무
백응기	안철한	윤남용	이소창	이학수	정승수	천재영	한영순	고승재	김용민	박준용	유홍성	이철준	주영선	김경희	전인숙	강경희	김원규	한용환	이영길	노순식	조강석	곽규은	김상수
변영구	양경화	윤미애	이승남	이한표	정용희	최경덕	한영옥	고재성	김우경	박진석	육은정	이한구	지영일	김관성	정구영	강민정	김원삼	한말자	이영희	류임상	조영주	곽승호	김석부
변정해	양재란	윤수영	이승현	이해철	정옥형	최광식	한은상	고정규	김원화	박찬대	윤관옥	이한용	진유성	김만식	정상권	강성중	김익태	한재철	이이형	류지현	조인순	곽창록	김선희
변정해	양정분	윤수영	이양순	이현정	정유리	최근우	한은상	구자길	김윤태	박태선	윤대기	이행숙	차광윤	김병석	정세윤	강인창	김인영	한정훈	이재란	맹창호	조하식	구남희	김성수
부태길	양희진	윤순성	이영구	이현호	정윤지	최낙수	한인경	권경자	김은경	박한정	윤동기	이현경	차득기	김상원	정연택	강지용	김정수	한철호	이재철	명진아	조호익	구신회	김성천
빈종진	안경숙	윤준호	이영섭	이현희	정윤희	최대규	한재수	권남구	김은영	박현수	윤명철	이형구	채 솔	김세민	정인호	강창균	김지성	현경호	이지영	박민숙	주홍중	구안서	김수남
빈종진	어덕경	윤태범	이영우	이호돌	정은영	최동규	한정민	권미정	김은용	방만근	윤미경	이형수	채진석	김수환	정태원	강태운	김창기	현영철	이진철	박종갑	지영선	권미경	김수열
서성원	어윤식	윤태범	이영현	이호영	정은희	최두열	한정현	권상현	김은철	방정환	윤지의	이희광	최경훈	김어진	조선환	고광희	김창순	현용택	이흥기	박종복	차춘희	권성안	김수환
서순희	엄기홍	윤항숙	이영훈	이호일	정인우	최명섭	한준학	권오경	김재경	배승휘	윤 호	임강민	최광용	김용권	지은숙	고관만	김창연	현종철	임종식	박종현	최경식	권수복	김숙자
서원교	엄주연	윤혜숙	이옥희	이후재	정일구	최명옥	한준호	권용희	김재식	배철현	윤희택	임병구	최광은	김용휘	진정현	고내수	김형진	현창석	임태진	박태서	최석남	권영기	김순구
서은숙	엄태준	윤희동	이용근	이 훈	정주연	최병률	한준희	권정호	김재영	백동수	이강훈	임준택	최금행	김재수	채순옥	고동철	박만용	홍광일	장석윤	박현희	최석림	권영주	김순영
서재호	엄태준	윤희태	이용만	이희상	정진웅	최병주	한해진	김갑봉	김종길	백민섭	이경진	임재훈	최두영	김정길	최문희	고보선	박성연	홍성화	서규석	최신수	권오건	김순천	
서정순	엄태희	은종원	이용연	임명원	정진학	최병탁	한희자	김경원	김종욱	변성준	이귀복	임현준	최병길	김정호	최종렬	고봉석	박시환	홍순민	정시식	서상욱	최창환	권태성	김안식
서혜주	엄희용	이강문	이우정	임상열	정춘화	최복순	함상식	김경태	김종화	서경옥	이기원	임희숙	최병윤	김종원	최진희	고봉수	박오범	홍용의	제재영	신종현	하중률	권혁상	김양식
서희숙	여재혁	이강수	이운용	임상열	정하국	최상동	함연자	김계원	김준우	서부길	이기태	임희진	최상희	김주희	하광호	고상봉	박종규	안영철	조양래	안시용	한광수	김갑용	김연식
성주영	여한수	이경수	이원희	임선미	정하근	최성원	허 림	김관호	김진영	서용성	이길성	장영민	최수진	김 준	하덕철	고성봉	변대근	창원경실련	최용주	양소조	한문식	김강일	김영근
성희연	오근철	이경수	이윤숙	임성규	정혜순	최영준	허범석	김광업	김진희	서정환	이덕환	장일진	최영민	김판용	한대호	고승한	변정철	강권식	최정현	오근식	허 영	김진도	김영미
손경자	오금석	이경호	이은상	임성기	제영기	최영준	허수행	김광호	김차중	서주선	이도희	장유진	최윤성	김혁수	한은주	고영미	부상원	강동석	최필호	오수근	허충일	김경호	김영민
손미경	오문석	이경화	이은상	임성환	조경국	최유영	허임범	김규를	김창문	서태원	이동기	전동춘	최윤지	나승수	한은덕	고영수	송대영	강대욱	하영기	오승화	황중현	김계승	김영욱
송경은	오명환	이광석	이은자	임영길	조계만	최용철	허임범	김근수	김칭우	서한희	이동현	전영우	최인용	나윤환	황병해	고영식	송석연	권대용	허효창	오인철	황천순	김계욱	김영재
송병광	오병재	이광세	이의성	임은혁	조길문	최용환	허준환	김기범	김태호	서해동	이루다	전용성	최장열	노병문	황선주	고재우	신용현	권재길	우승운			김관식	김영철
송영득	오석호	이광윤	이미술	임자희	조남של	최용환	현주섭	김기한	김태훈	서해안	이린우	전우진	최정자	류인평	고재일	안영철	김병성	천안아산경실련	원재희	원재희	청주경실련	김광남	김영태
송영득	오성순	이광재	이익재	임철만	조병돈	최은실	홍경아	김남돈	김하운	석 일	이문의	정기호	최정철	박규만	경음경실련	고정윤	양문석	김성욱	강민숙	유병국	김광렬	김영호	
송은주	오성용	이광호	이재범	임철순	조성복	최은희	홍성동	김덕중	나승일	성기건	이병철	정낙식	최준혁	박명수	강용구	고대식	양봉석	김영희	강인영	유진영	김광범	김영환	
송이식	오세린	이교관	이재성	임철재	조성숙	최인근	홍원표	김동완	나영우	성덕규	이상동	정두용	최찬용	박명진	고남용	기태선	양성국	김정한	강대운	윤건호	김광복	김영환	
송정호	오세영	이구현	이재용	임현권	조성화	최인식	홍은하	김동우	나종팔	성시용	이상영	정미경	최춘옥	박성근	고세창	김경용	양시경	김종삼	강필호	윤권중	김광수	김영희	
송준규	오주한	이기훈	이재학	임혁빈	조연숙	최인자	홍종민	김동호	나중훈	송경희	이상용	정석환	최 현	박암림	김용철	김군택	양욱희	김중운	강희두	윤미숙	김광직	김용국	
송혜진	오형선	이길수	이재희	임희옥	조용철	최재웅	황경애	김두영	나중현	송원덕	이상진	정선오	최화영	박호민	김을수	김기훈	양우선	김진철	고병현	윤일규	김광희	김용석	
신계영	우근배	이길윤	이정길	장경자	조정래	최재화	황규문	김영석	남세중	송인선	이선주	정순학	최효숙	백종철	김일중	김남혁	양진용	김차덕	고영술	윤정섭	김교선	김용승	
신덕선	우순애	이길윤	이정숙	장고환	조정숙	최정관	황규문	김명제	남영우	송창섭	이성한	정승연	한기남	손정환	김재오	김대호	양형택	김치명	구분영	이경숙	김계술	김용애	
신동신	우순희	이대현	이정숙	장동찬	조성성	최정수	황인동	김미현	남종희	송한철	이수명	정연중	한대수	송약용	김종술	김동욱	오승용	김한숙	구자형	이규희	김대중	김용규	
신동윤	우종만	이명신	이정형	장세웅	조철현	최정수	황인재	김병우	남지승	신숙영	이순복	정연중	한두현	심동희	김택술	김동전	오영익	김형석	권혁천	이명근	김동암	김유미	
신동천	우현녀	이문주	이중송	장여진	조춘순	최정숙	황현숙	김병철	남창섭	신영은	이애경	정원경	한만송	안수현	김학술	김미혜	오영환	나선애	김경은	이병덕	김동욱	김유정	
신두임	원광식	이미희	이중원	장영란	조택선	최정화		김봉수	남홍우	신은철	이연숙	정은식	한용우	안영미	김 현	김봉석	오정훈	나태연	김기태	이상일	김동일	김유호	
신영호	원용자	이박우	이중환	장영안	조택선	최 종	인천경실련	김상섭	도지성	신종화	이용우	정재영	한창원	안정훈	문성대	김봉철	윤영부	남정호	김길년	이상춘	김동진	김윤모	
신원재	원종수	이백선	이주윤	장영안	조한영	최종섭	인천북해항경기원센터	김상열	류권홍	심정순	이의재	정진오	함지현	양영희	박래수	김봉희	윤용택	도춘석	김미경	이서영	김명배	김응일	
신은순	원종순	이보연	이준호	장왕명	조취명	최종악	인천북합운송협회	김선홍	류병희	안동찬	이일희	정창훈	함창학	엄상섭	박영민	김부찬	이숙희	류병수	김미경	이선열	강 민	김명수	김일경
신종옥	유경윤	이복수	이중재	장원섭	주상운	최주욱	사단법인무지개	김 설	류재홍	안병준	이재필	정태원	허선규	오상현	송민수	김상오	이용민	문지영	김민수	이수현	김민오	김명수	김일경
신종옥	유상열	이복우	이진관	장원주	주상운	최춘봉	도영운수(주)	김성근	명선묵	엄명희	이재학	정하영	허창희	유창연	안길만	김상훈	이정민	박기문	김상관	이승열	강석형	김명자	김일수
신종화	유상희	이부경	이진혁	장재훈	지소연	최현숙	강경하	김성수	민근홍	엄연주	이재훈	정향진	홍욱표	윤철용	임현택	김 석	이창후	박용주	김세곤	이철호	강성래	김문보	김재복
신철승	유승열	이상년	이진희	전미숙	지응구	최현희	강대준	김세훈	민태운	엄용수	이정림	정훈교	홍유나	윤태영	유사현	김석범	임숙자	박혜진	김 연	장기수	강승범	김문옥	김재연
심관보	유연태	이상원	이찬우	전상진	지정철	하맹수	강덕우	김수만	박기욱	여승철	이정일	정희웅	홍인성	은영주	은종준	김성수	장원석	배정호	김준문	장명수	강신영	김미숙	김재춘
심규대	유영숙	이상은	이창규	전성호	지효숙	하태길	강명선	김승남	박상필	여정주	이종일	정희웅	황수연	은응우	이상길	김성준	장해철	서정열	김진태	장원철	강영희	김미희	김재춘
심형모	유원문	이상태	이창수	전영석	진선중	하현홍	강명수	김연옥	박상희	오경환	이주영	조광희	황용선	이기화	이상실	김세검	정상철	서정호	김철수	장재식	강은희	김민희	김재학
안광석	유재경	이상혁	이창수	전영애	진용상	한덕이	강성곤	김연옥	박석민	오병집	이주희	조난주	이민호	이원직	김수연	정선태	송태중	김태명	전오진	강진성	김백규	김재형	



김정문	남대우	박익규	석 준	양기정	윤건영	이선순	이철중	전세식	조운기	한인섭	박도수
김정미	남 불	박인숙	선종렬	양미선	윤관수	이선우	이철희	전용렬	조운행	한정현	박미현
김정승	남성옥	박인자	설경철	양승예	윤기웅	이상민	이철희	전용표	조은애	허석렬	박상규
김정웅	남종순	박재관	성광철	양찬섭	윤명숙	이수복	이철형	전우석	조을선	허성만	박정근
김정일	노근호	박재익	성기남	양철호	윤병희	이수영	이한훈	전재복	조이현	허 영	박형일
김정초	노영민	박종관	성주우	어미선	윤상이	이수한	이항미	전창해	조정식	허장권	방명열
김정태	도선봉	박종률	성환용	엄경출	윤승현	이순남	이현수	전희택	조항전	현상주	방수미
김종구	류규식	박중서	손세원	엄응구	윤정수	이순철	이현수	정교순	조한상	형미희	배은숙
김종기	류근모	박중선	손양호	연광석	윤정숙	이순호	이현식	정 균	조형규	홍강희	배 준
김종열	류근운	박중천	손호진	연규순	윤진현	이승준	이현주	정란희	주서택	홍경선	변용환
김종칠	류덕환	박중태	송길화	연규순	윤찬열	이승철	이형우	정미선	주성규	홍석원	변좌용
김종태	류연옥	박종태	송만호	연방희	윤태한	이재차	이형찬	정미화	주재구	홍석학	변지량
김주복	류우열	박주형	송봉화	연영규	윤한식	이연옥	이호진	정상섭	주재현	홍성학	변성기
김주환	류재형	박주호	송신호	연영태	윤호영	이영숙	이화련	정상신	주충식	홍승표	손헌기
김준경	류재호	박진우	송영준	연철흠	이건수	이영진	이호숙	정상옥	지동규	홍우표	송창근
김준기	류진호	박찬병	송영환	염봉순	이경순	이옥규	임건철	정상완	지 민	홍응표	신길호
김준년	류학천	박찬훈	송우경	오국진	이광용	이옥인	임규찬	정상용	지상오	황경수	신혜숙
김준수	류현숙	박철규	송의천	오명진	이광희	이윤범	임근수	정세용	지의경	황동훈	안봉진
김준태	맹석주	박철석	송일근	오복수	이귀형	이은희	임기수	정승희	지현성	황락훈	안호춘
김진철	문성오	박춘섭	송재경	오석승	이규선	이의성	임기중	정연숙	진경수	황선건	양태식
김창한	민경덕	박학준	송찬주	오연경	이규호	이인구	임동현	정영래	차충범	황성주	윤성중
김천식	민병관	박해덕	송필수	오영미	이근식	이일만	임성진	정영섭	채명순	황신모	윤준형
김 철	민성기	박호표	송해근	오영애	이기만	이일우	임성총	정영희	채평석	황영미	유영호
김춘희	민승기	박희분	신경은	오종영	이기정	이장한	임용수	정우영	채희관	황희연	유재원
김태성	민옥순	반영은	신국희	오태진	이대영	이장희	임용현	정우철	최각규	최경호	윤재경
김태영	민준형	반영일	신규식	우상동	이대용	이재덕	임윤희	정은희	최광민	최광민	윤재선
김태완	민형식	방현철	신동선	우장영	이동로	이재영	임은정	정인수	최대철	고태규	윤학로
김태웅	박공규	배관희	신범식	우정순	이두영	이재영	임의순	정일기	최맹섭	권용범	이관행
김태인	박관주	배병기	신성일	우희곤	이만형	이재원	임일남	정일택	최성희	김정숙	이복연
김태형	박광호	배상은	신승수	원광희	이맹원	이재은	임일수	정재량	최영선	김광배	이상섭
김태희	박구원	배용환	신승주	유광식	이명관	이재춘	임재경	정정필	최영중	김기남	이상철
김필제	박근수	배종서	신승진	유근수	이명순	이정규	임재규	정지성	최운침	김남철	이석원
김학민	박근수	백선행	신영구	유선우	이명호	이정석	임재일	정 진	최윤정	김대영	이승준
김한경	박기번	변광섭	신영희	유성훈	이명훈	이정수	임종승	정진아	최은실	김범철	이원규
김한근	박기환	변인수	신옥희	유승영	이미남	이종섭	임지은	정진원	최진완	김선배	이은영
김학수	박남순	변상태	신용재	유승덕	이미화	이종섭	임차남	정진하	최종진	김순옥	이인섭
김현미	박동구	변상호	신형호	유영덕	이민영	이중수	임한빈	정 철	최태호	김승현	이중민
김현수	박영규	변성민	신태경	유영숙	이배근	이중실	임한수	정충선	최현숙	김용재	임재선
김현숙	박문희	변은영	신필희	유영아	이범구	이중옥	임혜숙	정해영	최형도	김정욱	전규호
김현주	박미영	변의수	신현식	유응모	이범석	이중윤	임혜숙	정현순	최형익	김정현	전근우
김형근	박민순	변장섭	신희숙	유인봉	이범진	이중한	장경석	정희승	최호균	김종범	전동준
김형래	박범혁	봉원진	심규석	유일수	이병관	이주봉	장남운	조경주	표한홍	김종식	전만식
김형선	박서연	서길용	심상학	유재일	이병권	이주선	장동대	조국현	풍경섭	김준수	전성휘
김홍구	박석현	서대석	심수영	유정훈	이병수	이주형	장병희	조동순	하육란	김평안	전안호
김홍성	박선현	서영순	심영미	유주하	이병호	이주희	장병희	조상현	한재성	김한택	전운성
김환국	박성호	서영희	안병대	유재연	이복순	이준수	장영건	조상현	한기억	김해경	전호성
김환래	박성희	서완석	안성호	유철호	이상규	이중섭	장재봉	조성구	한동훈	김희성	정의성
김희수	박세웅	서용원	안영숙	유행열	이상복	이중원	장호진	조성오	한승환	김희성	정의성
김희식	박연수	서우석	안정환	유현철	이상술	이중훈	전광호	조승연	한수환	남형우	정지만
나채경	박영순	서준철	안창한	유현철	이상술	이중훈	전광호	조승연	한은례	박경철	정종교
남기상	박용석	서효석	안치석	육미선	이상중	이지영	전년규	조완영	한익돈	박대진	정휘돈
남기용	박용연	석영용	양계인	육종길	이상준	이창훈	전병선	조윤숙			

조성모	해광스님	김상수	김태현	서윤기	이상윤	장현수	최재봉
조성자	황보원주	김성희	김태희	손종수	이세환	전극중	최재용
진장철	강창성	김시경	김현실	손진찬	이수창	전정렬	최정식
최영진	공영서	김수구	김현철	송희연	이영철	정우영	최태열
최충익	구지옥	김용갑	김현표	안창한	이욱재	정은미	최희수
최희수	권부혁	김원우	김현희	양기정	이운용	정태문	태평초
하상준	권영준	김은정	나기합	양정희	이원탁	정해영	편도선
한광수	권오일	김익태	나창호	우홍인	이익창	정 휘	하승환
한희민	권태석	김장수	남공진	유성찬	이정미	정희철	한상복
함대성	권태훈	김재석	남승국	유재준	이정은	조동욱	허태구
함형주	김규만	김재철	박문태	윤해정	이준희	조송이	
황덕호	김대영	김정혜	박상조	이경식	이지은	조용석	
황해숙	김동완	김종윤	박 일	이국희	임미진	조은경	
김동환	김진두	박임성	이동철	장병화	지승익		
김우영	김진순	박정환	이동훈	장성숙	진기은		
김문규	김태석	박태승	이미아	장인회	최동수		
김미경	김태진	방성호	이상민	장정선	최병문		

포항경실련

☞계이말티 조규용 ☞계일산기 박의룡 ☞계일테크노스

중앙경실련

사무총장	766-5626	고계현	766-5625	팀장: 권오인
기획·총무팀	741-8566	사무처장: 윤순철, 부장: 채준하, 간사: 오세형	766-5624	간사: 홍명근
회계·홍보팀	744-0400	간사: 정지영	766-5627	팀장: 윤철환
경제정책팀	3673-2141	팀장: 김한기, 간사: 최예지, 이학린	3673-2146	팀장: 이기웅, 간사: 권태환
정치사법팀	3673-2145	팀장: 김삼수, 간사: 유애지	765-9732	간사: 박지호
사회정책팀	3673-2142	팀장: 남은경, 간사: 정택수	3673-2143	
국제팀	766-5623	간사: 이현아	766-5629	이사: 음유정, 김용재
부동산감시팀	766-9736	팀장: 윤철현, 간사: 윤은주		
국제사업팀	766-5628	부장: 최승섭		

지역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031-253-2266	총청년		
광역시		천안·아산경실련	041-552-2040	국장: 정병인
광주경실련	062-528-4851	청주경실련	043-263-8006	처장: 최윤정, 국장: 이병만, 간사: 신명자, 신명수
대구경실련	053-754-2533	경상권		
대전경실련	042-254-8060	거제경실련	055-637-9451	국장: 이상식, 간사: 박희자
부산경실련	051-761-3951	청원경실련(준)	055-263-0030	정책위원장: 이지영, 국장: 오정환
인천경실련	032-423-2950	경주경실련	054-773-7851	국장: 이원희, 간사: 방현주
경기·강원권		구미경실련	054-453-1787	국장: 조근래
경기		포항경실련	054-278-4637	국장: 장정선
광명경실련	031-253-2266	울릉지회	054-791-0085	국장: 김유길
광명경실련	02-2614-1224	전라·제주권		
군포경실련	031-392-3111	순천경실련	061-751-9993	국장: 이상희
수원경실련	031-253-2266	여수경실련	061-643-2110	처장: 박호준
안산경실련	031-402-6116	목포경실련	061-283-4571	국장: 장미
안양 의왕경실련	031-443-6730	군산경실련	063-443-5733	간사: 최가자
김포경실련	031-997-0044	전주경실련	063-273-4903-4	국장: 한병규, 간사: 권미경
이천 여주경실련	031-635-7575	정읍경실련	063-536-6225	간사: 김은정
강릉경실련	033-645-0828	남원경실련	063-633-6662	
속초경실련	033-636-6631	제주경실련	064-726-2530	처장: 좌광일
춘천경실련	033-241-9486			